

출장보고서

제63차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실무작업반(WP1) 회의
2011. 03. 17~18
프랑스 파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김현욱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김연수

1. 회의 개요

① 회의 성격

- WP1은* OECD산하 EPC(Economic Policy Committee, 경제정책 위원회)의 준비작업반으로서 세계경제 현황과 거시경제 전망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

- 동 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OECD EPC 본회의에 반영.

② 회의개요

- 일 시 : 3.17(목)~18(금)
- 장 소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 대표단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이억원)
경제정책국 사무관(백산)
KDI 거시경제연구부장(김현욱)
KDI 부연구위원(김연수)
녹색위 과장(박항신)

③ 회의 의제

- ① Round 1: 녹색성장 종합 보고서(Green Growth : synthesis report)

※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에 대한 발제를 맡기로 함

- ② Round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 ③ Round 3~4: 거시경제 위험분담(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 ④ Round 5: 고용 회귀(Return to work)

2. 출장 일정

일 시		주요 행사	비고
3.14 (월)	14:00	· 사무관 인천 출발	· KE 902
	18:10	· 파리 도착 → 호텔 이동	· pick-up
3.15 (화)		· EDRC회의	· 사무관 참가
	14:00	· 대표단 인천 출발	· KE 902
	18:10	· 파리 도착 → 호텔 이동	· pick-up
		· 저녁(미정)	
3.16 (수)		· 사전회의	
		· 저녁 : 대표단	· 미정
3.17 (목)	09:00~09:30	· 회의장 출발	· 회의장까지 차량지원
	10:00~12:15	· Round 1 - 녹색성장 종합 보고서(Green Growth : synthesis report)	· 발제
	12:15~13:00	· Round 2 -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13:00~15:00	· OECD 주최 수석대표 오찬 · 출장자 OECD 구내식당이용	· 수석대표 참석
	15:00~18:00	· Round 3~4 - 거시경제 위험분담(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19:00	· 저녁 : 만찬	
3.18 (목)	10:00~13:00	· Round 5 - 고용 회귀(Return to work)	
	13:00~15:00	· 오찬	
	15:00~19:30	· 전문작성	
	20:35	· 파리출발	· KE902
3.19 (토)	15:25	· 인천도착	

3. 대표단 명단

소 속	직 위(급)	성 명	분야	연락처
기획 재정부	경제정책국 과장 (Director)	이억원 Lee, Eog-Weon	수석 대표	2150-2810 010-****-**** ewlee@mosf.go.kr
	경제분석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백산 Baek, San	총괄 행정	2150-2736 010-****-**** sanbaek@mosf.go.kr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Director)	김현욱 Kim, Hyun Wook	거시	02-759-4232 010-****-**** hook@kdi.re.kr
KDI	부 연구위원 (Associate Fellow)	김연수(여) Kim, Yeon Soo	거시	02-958-4093 010-****-**** ykim@kdi.re.kr
녹색위	과장(Director)	박항신 Park, Hang Shin	녹색	02-735-2450 010-****-**** hspark7@korea.kr

Round 1. Green Growth Strategy Synthesis Report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의제 요약

1. 종합 보고서 개요

○ 목 표

- 금년 MCM회의(11.5월) 이후, 녹색성장을 OECD 논의의 핵심 의제화(mainstreaming)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Mandate 확보 (OECD 녹색성장 최초 보고서) .
- 향후 OECD의 녹색성장 논의(Programme of work)의 기본방향 제공.

※ 향후 논의주제(분야별): green job, green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 분야 국제협력, 녹색성장과 생물다양성, 녹색성장과 도시, 녹색성장과 개발협력 등.

○ 성격 및 특징

- 녹색경제(Greener economy)로의 전환(transition) 및 동 전환에 필요 종합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녹색성장전략 수립·추진에 필요한 분석틀(analytical lens)을 제공 의도로 작성.

※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처방(prescriptive) 제시가 목적이 아님

○ 수요 대상

-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 다양하고 유연한 policy framework을 제공하고 동 정책을 각국의 여건 및 개발정도에 따라 동 맞춤형(tailor)으로 적용하도록 작성.

○ 핵심 전달 메시지

- 녹색성장은 핵심 경제 이슈로 간주하고 경제 구조적 개혁 (reform) 차원에서 동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OECD 각료급 Roundtable('10.12)회의에서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대표 참석.

2. 주요 내용요약 (붙임 : 세부내용 참조)

제1장 :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 (성장의 재조명) 기존의 성장(growth) 방식은 자연자원이 경제 성장과 후생에 기여하는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 것임.
 - 현재 경제 활동이 자연자원의 재생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후생수준 뿐아니라 경제성장 그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특히, 현재의 생산과 소비행태, 기술과 인프라의 과거의 인센티브(incentive) 체계를 반영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악영향으로 환경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악화 전망.
- 이러한 경제·환경적 불균형(environmental imbalances) 시장에서 스스로 교정될 수 없으며 악화일로 있음.
 - 따라서, 경제·환경적 정책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성장모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의 시발점임.
 -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자연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인프라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게 하고 혁신(innovation)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기회창출) 녹색 경제로의 이행은 trade-offs를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기회요소는 다음 세 가지에 기반함.
 - 환경문제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혁신(innovation) 창출.

- 반(反)환경적인 보조금 철폐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
- 경제적 비용이 높은 환경적 피해 예방.

※ IEA는 2010년과 2050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녹색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규모의 17%(46 조 달러) 확대는 112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연료사용 감축효과 예측.

제2장 : 녹색성장으로 전환촉진을 위한 정책

○ (기본방향) 경제·환경 정책의 통합

-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효율적 자원사용을 반영한 “경제·환경 의사결정의 통합”이 필요.
- 경제전반의 다양한 분야(Sector)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대상.

○ (추진방식) 국가 경제·환경 개혁(Reform) 작업과 병행추진.

- 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경제·환경 정책의 개혁(Reform) 정책과 상호보완 과제로 추진 필요(각국의 전반적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
- 동 과정에서 핵심은 “Best Policy Mix”를 찾아내는 것임.

○ 녹색성장 정책조합 (Policy Mix)

<녹색성장 정책조합의 일반 고려사항>

- 투자(Investment) 결정에 있어 자연환경 이용에 대한 적절한 가격산정.
-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연자원기반에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려.
- 기존 인프라의 고착화에서 기인하는 녹색경제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
- 혁신(Innovation)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녹색성장 촉진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 ① 녹색조세제도(성장과 자연자산 이용간의 균형모색)
- ② 보조금(subsidy) 제도 개선
- ③ 기준 설정 및 자발적 참여
- ④ 규제환경 (regulation) 개선
- ⑤ 에너지 인프라 개선
- ⑥ 혁신 (R&D 정책, 산업정책 등을 통한 혁신(Innovation))
- ⑦ 자원 조달

① 녹색조세제도

- 환경 외부비용(externality)을 내재화하는 경제적 유인제도(economic instrument).
- 녹색 혁신을 유도하는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율이 낮음.
- 이는 동 제도의 향후 핵심적 정책도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② 보조금 제도

- 경제적 · 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 비용 유발하는(화석연료 보조금 등) 보조금 제거 필요하여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i) 생산관련 의사결정과 무역흐름을 왜곡시키고 환경 유해한 이전지출 (transfer) 제거.
 - (ii)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 (iii) 경제적 ·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생산자에게 동기부여하는 방안 모색.

③ 기준 설정 및 자발적 참여(Non-Market Instrument)

- 시장기반 정책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준(standard)을 설정, rating이나 에코 라벨링 같은 자발적 접근 정책이 유용.

④ 규제환경 (regulation) 개선

- (녹색성장 공급 측면) (i)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유도하고, (ii) 확고한 자원자원 사용자 권리 보장을 통해 자원을 관리케 하며, (iii)공동 협력을 통해 자원 관리를 도모.
- (녹색성장 소비 측면) 소비 행동 변화를 위해 (i) 환경에 대한 가격 부과 (ii)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의 질과 신뢰성 향상 (iii) 녹색 지식과 인식을 강화.

⑤ 에너지 인프라 개선

-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에너지 분야가 특히 중요..
 - ※ 인프라 구축에 있어 자원동원이 핵심요소 (IEA는 일반적 전기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2030까지 330억 소요전망).
- 인프라 개선 자원 조달에 선결되어야할 위험요소 경감노력 및 공공-민간 파트너쉽 기반 Fund 조성이 필요하며 개도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ODA 자금을 의할 수 밖에 없음.

⑥ 혁신 (Innovation)

-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해서는 가격(pricing)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혁신(Innovation)이 필수적임.
- 현재 '녹색' 과 '성장'을 병행 추진할 기술 개발, 조직과 시스템 등에 있어서 충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혁신관련 주요정책: R&D 증강, 개선된 Financing 접근, 조달 등 수요측면 정책강화, 이해관계에 기인한 혁신지연, 지적재산권 등을 고려한 기술이전 등.

제3장 : 녹색성장 추진의 정치·경제학

- ◇ 개혁(Reform) 실현 차원에 추진되어야 하는 녹색성장의 정치·경제학적 고려사항
- ◇ 여타 경제개혁 추진에서 얻는 정책·경제학적 고려사항에 근거 제시

○ 노동시장

- 녹색성장으로 전환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발하며 어떻게 노동시장이 재편성되는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 이러한 불확실성은 노동수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재편이 경제전반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에 기인
- 모델에 따른 예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나 동 분야에 대한 고용비율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대규모 직업이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녹색성장 정책으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는 노동분야는 7개 정도로 예상(수송분야 3개, 에너지 분야 2개, 제조업분야 2개) 되며 육상 교통 분야 정도가 고용의 정도가 높음(총 고용의 4.4%, 총 숙련고요의 5.7%)
- 교통, 에너지 등 공해유발 산업분야의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소수 특정 부문 종사 인력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에 유의할 필요
- 녹색성장의 순고용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성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
- 고유의 녹색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효과적일수도 있으나, 행정의 복잡성, 적용의 형평성 등 감안시 일반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분배 효과

- 녹색성장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녹색정책이 소득분배 영향에 대해 세심한 고려 필요
 - ※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한 오염감소, 경제성장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낮게 평가할 필요
- 그러나, 산업경쟁력 훼손 및 일자리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우려, 다른 국가로의 기업이전(pollution haven) 등으로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환경규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은 적용면제, 재정지원, 수입단계 과세 등이 존재하며 각국 정책환경에 따라 다층적 정책조합이 필요
-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세 면제보다는 소득세 인하, 사회보장 확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경쟁력, 보호주의 등

- 녹색성장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으나, 국내 산업 등을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 장기적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음
 - ※ 국내산업을 선호하는 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며, 특히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조세경쟁을 유발하게 됨.
-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국가간의 지원수준에 차이가 클 경우 보조금이 가장 많은 국가로 공급이 증가하고 여타 국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왜곡을 유발
 - ※ 중립적인 환경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책설계 단계에서 중립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제4장 : 녹색성장의 측정

○ 녹색성장 정의 (지표생산 차원)

- (녹색측면) 녹색성장은 자연자원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임
- (성장측면)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로 옮겨가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것임

○ 녹색성장 측정시 주요고려 사항

- (녹색) 지표들은 생산 및 소비에서의 환경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 (성장) 환경문제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성장잠재력 평가 가능
 - ※ GDP가 환경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물질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건강, 사회적 접촉 및 안전보장 등 삶의 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 인식 필요

○ 녹색성장 측정체계

- 아래 4대 분야로 구성
 - (i) 생산 및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 (ii) 천연자원 자산기반 측정 지표
 - (iii) 환경적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지표
 - (iv) 정책적 대응과 경제적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
- 하위지표로 녹색성장, 방법론적 건전성과 측정가능성을 위해 30개 지표가 제시
 - ※ 이중 20개는 현재 측정가능하지만 녹색성장의 다양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평가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계
- 녹색성장에 대한 지수화 작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 대신 녹색성

장 전반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를 정하여 활용

- 대표지표(Headline Indicator): 현재 2개 지표가 검토 중
 - 하나는 생산 및 소비시의 온실가스배출(greenhouse gas emissions)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양소 균형(nutrient balance)와 농산물 활동과 관련된 것임
 - 이는 지구차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대표성, 경제성장과의 연계성,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OECD 녹색성장 지표의 구성 〉

A. Headline indicators	
Monitor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H1a Production-based CO2 emission intensities ▶H1b Demand-based CO2 emission intensities ▶H2 Nutrient balances in agriculture
B. Measurable indicators for inclusion in 2011 MCM Report	
Topic	Indicator
<u>Socio-economic context</u>	
<i>Indicators not attributable to specific themes → describing the general context)</i>	Population growth & density
	Growth and structure of GDP
	Household disposable income
	Level of education /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 unemployment
<u>Monitor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u>	
Carbon intensity & energy efficiency	1. Energy related CO2 emission intensities (production-based, demand-based) → GHG emissions
	2. Energy intensity: total and by sector (manufacturing, freight transport, passenger transport, households, services)
	3.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energy supply, in electricity production)
Pollution loads and intensities	4. Nutrient balances in agriculture (nitrogen; phosphorous)
	5. Emission intensities of NOx and SOx
Productivity & resource efficiency	6. Non-energy material intensities by material groups
<u>Monitoring the natural asset base</u>	
Renewable stocks	7. Freshwater resources: availability and intensity of use
	8. Forest resources: area and volume
	9. Fish resources: 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safe biological limits (global)
	10. Fish resources: share of aquaculture in total fish catch
Biodiversity and ecosystem productivity	11. Land use changes
	12. Threatened species
<u>Monitoring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u>	
Environmental health and risks	13. Population exposure to air pollution (selected countries)
	14. Urban air quality: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al services and amenities	15. Population connected to sewage treatment plants
<u>Monitoring policy responses and economic opportunities</u>	
Technology and innovation	16. Government R&D expenditure of importance to green growth (renewable energy; environmental technologies)
	17. Patents of importance to green growth (renewable energy; environmental technologies)
Prices & and transfers	18.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s
	19. Energy prices and taxes
International transfers	2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importance to green growth (environmental protection, renewable energy, Rio Conventions)
Entrepreneurship and produc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21. Value-added in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 (selected countries)
C. The full list of OECD GG indicators is available in the report Measuring Progress towards Green Growth: OECD Indicators	

제5장 :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 및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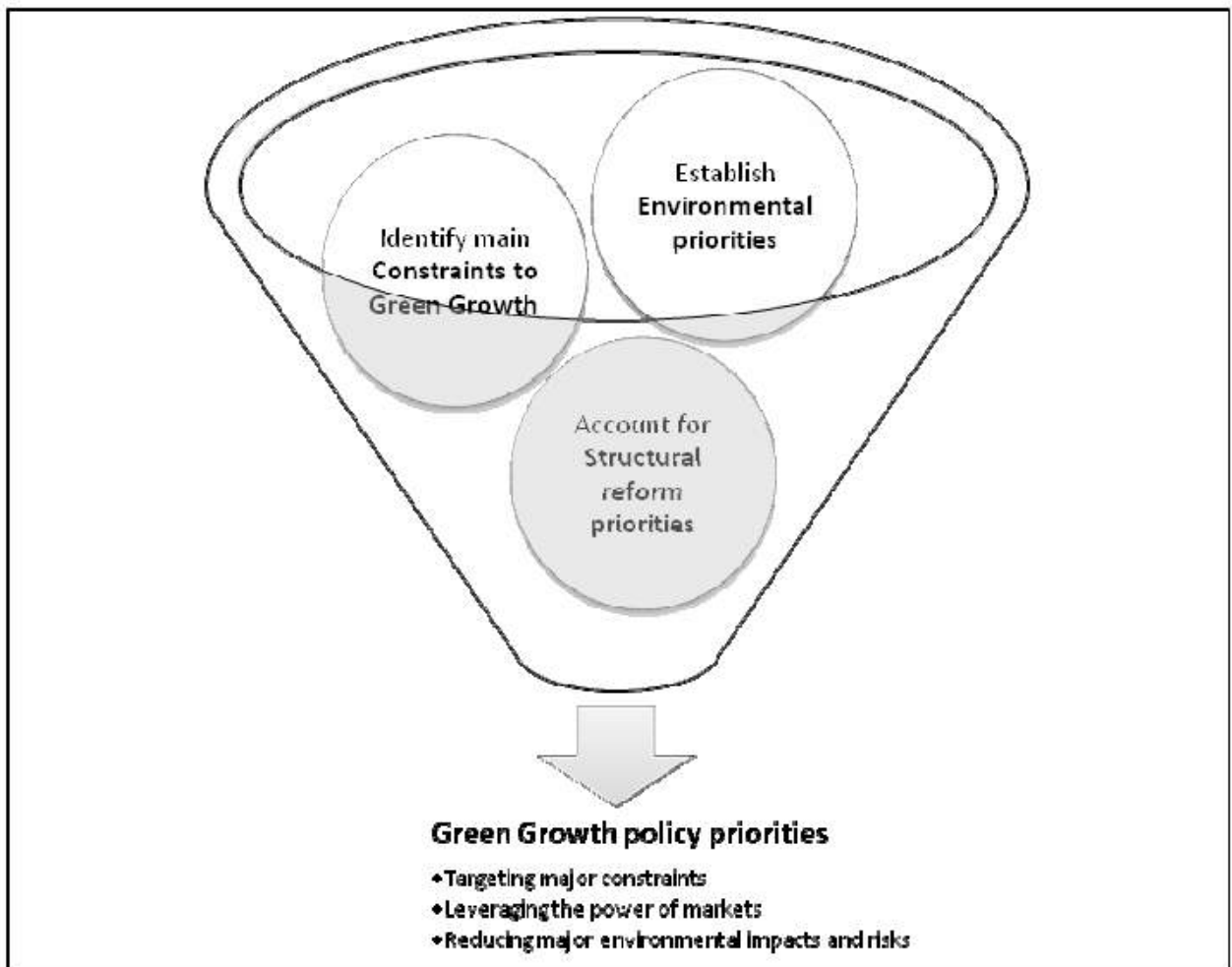
◇ OECD의 경제 구조개혁(Reform) 우선순위 설정·평가 방식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진전평가

1) 녹색성장전략의 수립(Constructing green growth strategies)

○ 녹색성장전략은 환경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에 대한 핵심적인 시장제약요인(market constraints)을 진단한 후, 이를 경제 개혁 우선순위와 연계

※ 제약요인들의 중요도는 발전단계 · 경제상황 · 경제 및 환경정책 구조에 따라 다르며, 단계적인(sequential) 것은 아님

< OECD 녹색성장 전략 수립의 핵심요소 >



<녹색성장 제약요인>

○ “정부실패, 시장실패, 시장 불완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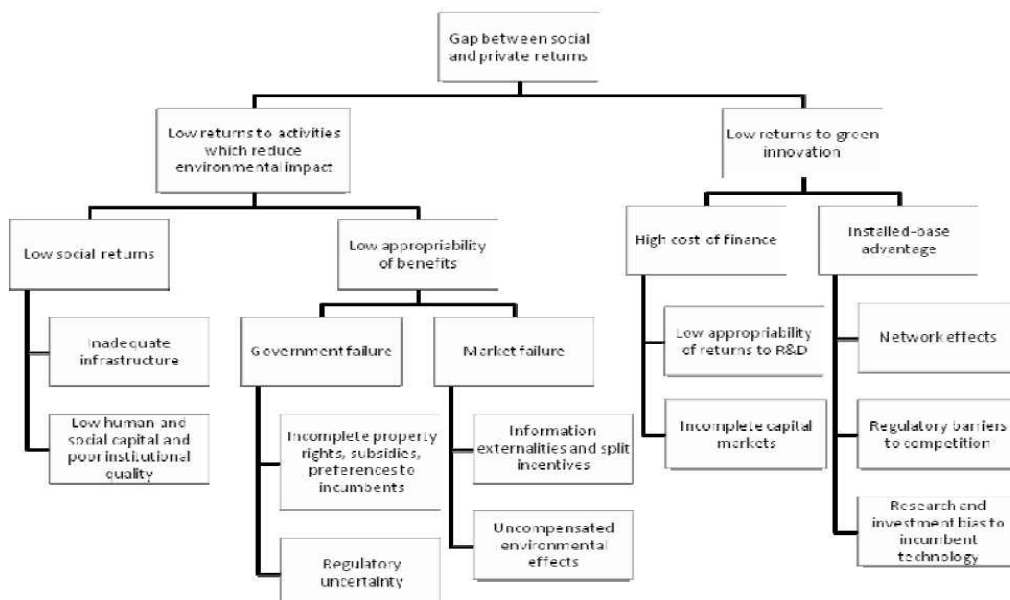
- (정부실패) 화석연료보조금정책과 같이 전체 경제활동을 저하시키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정책적 실패
- (시장실패) 대체로 공공재, 환경 외부성 또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장애요인 등
- (시장 불완전성)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시장의 특징

※ 근본적인 제약요인들은 실제로 중복되며, 각기 다른 경제상황에 잘 도식화(map well) 되는 것은 아님

○ 경제활동의 사적이익(private returns)과 전체 사회이익 상호간의 간격(gap)

- 사적이익과 사회이익간 간격은 2개 사안으로 구분가능(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적은 이익(returns) 및 녹색 이노베이션에 대한 낮은 이익)

Figure 30. Green growth diagno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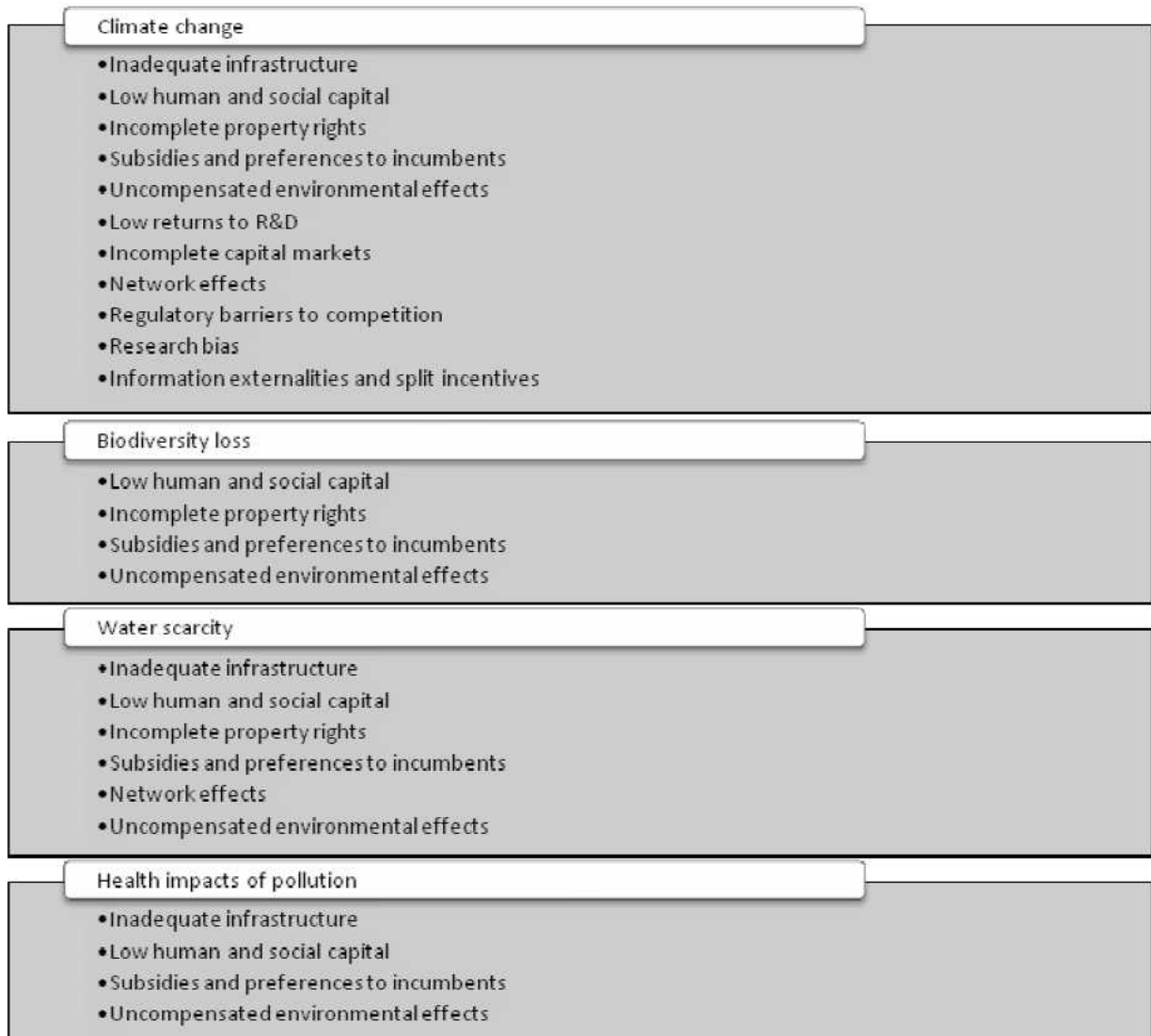
- 정부계획의 명확성 정도, 즉 규제의 확실성(regulatory certainty)도 중요 요인

<환경적 우선순위의 설정>

- 녹색성장 제약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환경적 우선순위들에 따라 다를 것임. 각국에서 환경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다음 사항고려

- 영향의 확실성 : 피해발생 개연성, 증거의 정도
- 非선형적(non-linear) 변화의 가능성 : 갑작스러운 변화 가능성 정도
- 시기적 적절성(timing) : 행동과 환경적 피해간의 시기적 연계
- 영향의 심각성(severity) : 피해로 인한 비용, 피해의 위협정도
- 영향의 분배적인 측면 : 특정분야나 사회계층에 미치는 분배 영향

Figure 31. Constraints on green growth and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 구조적인 경제개혁 우선순위와의 연결(link)

- 개혁 우선과제를 설정할(ranking) 때에는 구조적 경제개혁과 녹색성장 제약요인 상호간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 즉, 성장 제약요인이면서 동시에 녹색성장 제약요인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인프라 개선, 이노베이션 인센티브의 증진 등)
 - 녹색성장 제약요인을 줄이는 것이 구조개혁우선순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웰빙(wellbeing)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환경적 외부성에 대응하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음.
 - 체계적인 환경적 위험 대응에서 사전유의하는 입장(precautionary stance)이 요구됨에 따라 녹색성장 우선순위와 구조개혁 우선순위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부여 또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조(subsidy) 등과 같이 정책실패위험과 성공혜택이 모두 큰 경우에서 발생 가능함. 명백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caution)해야 하며, 다른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할 것임.

<녹색성장 제약요인과 구조적 경제개혁 우선순위>

녹색성장 제약요인	구조적 경제개혁 우선순위
○ 부적합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의 질 개선 - 네트워크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 낮은 인적자본, 사회자본, 제도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제도 강화, 교육 효과성 및 성과 개선 - 노동시장참여 인센티브의 개선
○ 불완전한 재산권, 현 활동자(incumbents)에 대한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소유·투자·교역 장애요인 감축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감축 - 생산시장 규제의 개혁 및 단순화 - 에너지 보조금 제거
○ 보상되지 않는 환경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소유·투자·교역 장애요인 감축 - 조세제도의 구조강화 및 개혁
○ R&D에 대한 적은 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및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 불완전한 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 정비·개선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경쟁 강화
○ 경쟁에 대한 규제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장 규제의 개혁 및 단순화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감축
○ 연구와 투자에서의 편견(bi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및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 녹색성장 정책 Package의 구성

○ 적절성 판단 기준

- Stringency: 정책타겟이 얼마나 ambitious한가?
- Predictability:- 투자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 Flexibility: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에 대한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선택?
- Incidence: 정책이 환경적 목표를 잘 타겟으로 삼고 있는가?
- Depth: 앞으로 상향조정될 목표에 맞게 혁신을 계속할 인센티브가 있는가?

○ 이상적인 정책의 구성 요소

- 적정 수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해야 함
-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 참신한 해결방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어야 함
- 정책목표에 긴밀하게 연계(closely targeted)되어야 함
-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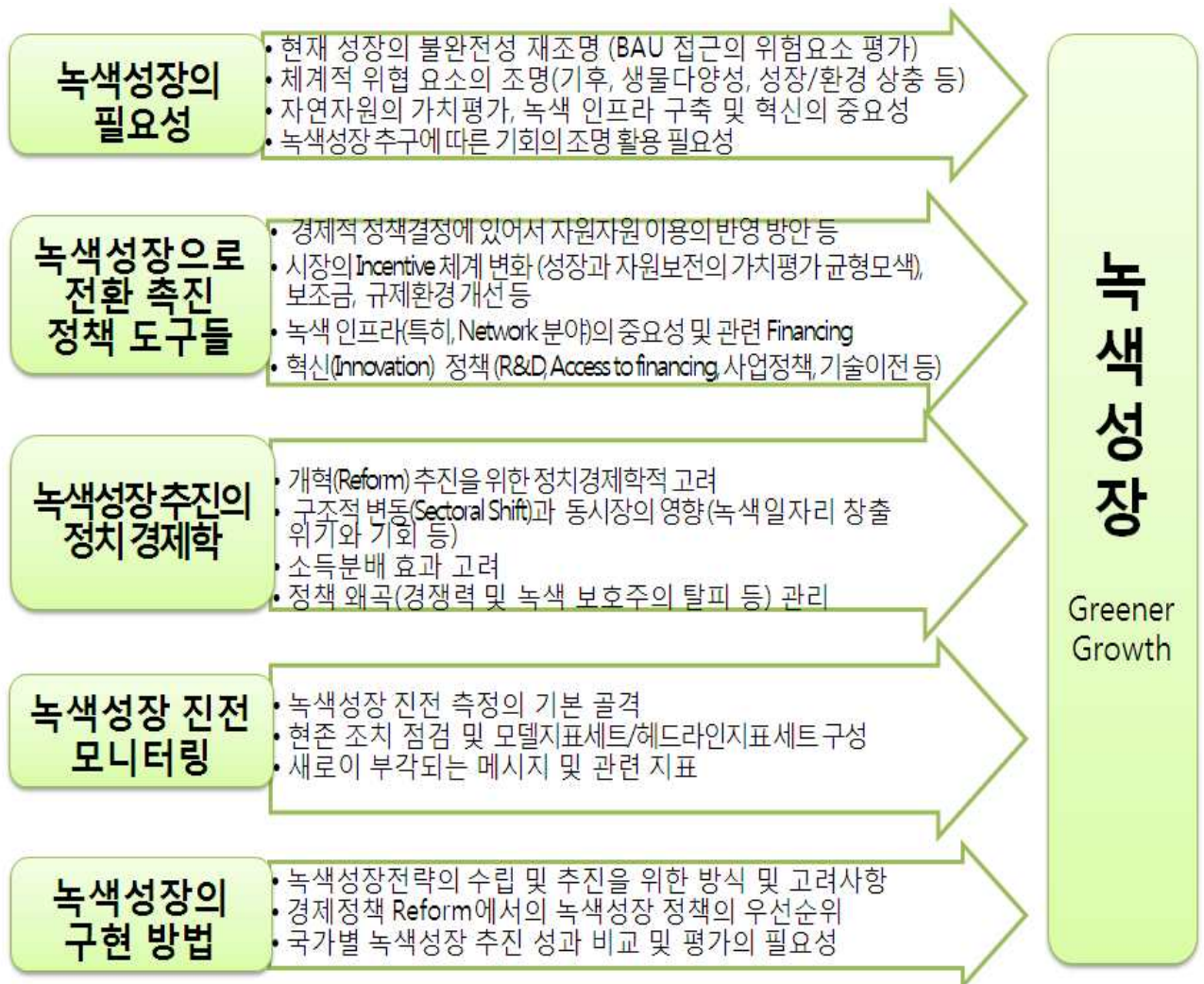
Table 13. Possible policies to address green growth constraints

Green growth constraints	Possible policy options
Poor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es • Tariffs • Transfers • Public-private partnerships
Low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poor institutional 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es • Subsidy reform/removal
Incomplete property rights, subsi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 and reform or remove
Regulatory uncertai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targets • Create independent governance systems
Information externalities and split incen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elling • Voluntary approaches • Subsidies • Technology and performance standards
Environmental externa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es • Tradable permits • Subsidies
Low returns to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 Focus on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Incomplete venture capital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ster venture capital networks • Subsidies
Network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 competition in network industries • Subsidies or loan guarantees for new network projects.
Regulatory barriers to compet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orm regulation • Reduce government monopoly
Research and investment bias to incumbent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 Adoption incentives/subsidies (e.g. feed-in tariffs)

3) 녹색성장전략의 국가별 비교 및 정책 평가

-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OECD는 녹색성장 지표(green growth indicators)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진단 과정은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평가하는 OECD의 Going for Growth 보고서의 방법론에 기반해야 함
 - 지표에 근거한 정책우선순위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country-specific)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맞아야 함
- 최종적 목표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임.
 - 이러한 Going for Green Growth 프로젝트는 정책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단 지식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것임

〈OECD 녹색성장전략 도식〉



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동 보고서는 다수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프로젝트(Horizontal Project)로서, 관계 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안을 발표하고(3월 29일) 금년 5월 MCM 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
 - 지난 2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성장체제(Framework of growth), 고용 상태(Position of employment), 지표(Indicator) 및 발전(Development) 등 4개의 주요 메시지(message)가 제시되었음을 소개
 - 최종안 발표 이후 식품·농업(Food and agriculture)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관련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
- 아국 대표단은 동 세션의 발제를 맡아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보완방안을 제안하고 한국의 정책사례를 소개
 - 동 보고서의 보완방안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이 국가내 다양한 부처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내 거버넌스 이슈(Governance issues)와 국제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함을 제안
 - 또한 동 보고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제안이 필요함을 지적
 - 아국의 정책사례로서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 효율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
 - 아국 발표에 대해 다수의 국가가 공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구

체적 방안으로 국제협력의 역할(뉴질랜드, 스페인 및 터키 대표)을 확대하고, OECD 비회원국(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미국 대표)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

- 대다수의 국가들은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OECD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
 - 다수 회원국이 분배효과(Distributional impacts)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태리 및 프랑스 대표는 특히 Carbon leakage*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 탄소배출 억제 등의 환경규제에 국가간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 관련산업 등이 이동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
 - 녹색성장 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회원국이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세부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 이에 대해 사무국은 5월 최종보고서 발표시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 녹색성장전략이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증진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프랑스 대표는 고용의 잠재효과 측정이 어려움을 주장하였으며, 호주와 스페인 대표도 고용효과에 대해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
-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에 대한 대다수 국가의 호평과는 달리 멕시코 대표는 동 보고서가 녹색성장정책 전반을 설명하지 못

하고 있으며, 작년 COP16회의(멕시코 칸쿤)에서 합의된 녹색 펀드(Green fund) 설립을 추진할 것과 UN환경지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녹색지표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함을 주장

- 한편, 일본의 원전사고가 전세계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가가 원자력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
 -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 대표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주장하였으며, 독일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원자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다만 스웨덴 대표는 동 보고서에서 원자력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때 해외 원전 수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Round 2. Informal Economy (비공식 경제)

의제 요약

1. 배경

- 비공식 경제의 특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
 -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 안전망과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요.
 - 비공식 부문은 다양한 경로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재정건전화에 대두되는 시기에 세수 손실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OECD 사무국은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즉시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들과 중기적인 관점에서 후일에 착수할 작업들을 찾을 수 있음.
 - 12 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을 담을 수 있음:
 - 제한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공식 경제의 패턴과 비공식성(informality)과 정책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고, 국가차원의 혹은 국가간 비교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하여 몇몇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도 가능함.
 - 비공식 경제의 결정요인과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다룬 분석적인 틀 수립.
 - 중기적인 관점에서 OECD 통계국과의 공동작업 하에 자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음.
 - 국민계정에서 비관측 경제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한 경제 부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국가간, 부문간 비교를 통해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비공식 부문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
- 그러나 자료의 범위와 시의적절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중기적으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비공식 경제가 왜 중요한가?

□ 비공식 경제로 인한 영향은 광범위함.

-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 안전망과 보험에서 제외.
- 비공식 부문은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침.
 - 비공식 부문 기업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거나 비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 또한, 자본과 R&D에의 투자를 위한 채원조달이나 인력확보가 어려움.
 - 반면, 공식 부문에 과도한 장벽이 있을 경우 자원 낭비를 줄여 주는 측면이 있음.
- 세수가 감소하여 공식 부문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과도한 이용으로 성장을 저해.
- 사회통합과 공공단체에 대한 신뢰 저해.
- 경제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최적의 아닌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

비공식성의 정의

-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는 관측되지 않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제활동이나 거래를 지칭하나 정책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식 경제의 정의는 합법적인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과 거래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되며, 이를 비교 가능한 국가간 통계로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임.

비공식성의 종류

- 최근의 연구들은 특정 근로자나 기업들이 대부분 비자발적이 아닌 선택에 의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함을 밝힘.
- 비공식 경제는 다음의 주체들을 포함할 수 있음:
 - 기업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세금 당국에 일자리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비공식적인 경우로, 무허가 길거리 상인 등을 포함.
 - 비공식 부문 혹은 공식 부문의 기업이 경제활동의 일부나 전체가 비공식 생산인 경우.
- 각종 비공식 경제활동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국가간 비교 자료는 매우 미흡함.

3. 간단한 분석틀(framework)

-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의 비공식 부문에의 참여는 발각되었을 시 처벌받을 확률을 감안한 상대적 비용편익분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공식 부문에 종사하여 얻는 순이익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여 얻는 순이익보다 클 때 공식 부문에 종사할 것임.

$$\underbrace{w^F_i(1-t_i) - C^F_i + B_i^F}_{\text{Net income formal}} \geq \underbrace{(1-p)(w^{IF}_i + \alpha B_i^F)}_{\text{Net income informal, not detected}} + \underbrace{p(w^{IF}_i + \alpha B_i^F - Pen_i)}_{\text{Net income informal, detected}} \quad (1)$$

- 기업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공식 부문에서 생산할지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할지를 결정함.

$$\underbrace{Y_j^F(1-t^p) - w_j^F - CF_j^F + BF_j^F}_{\text{Net revenues formal}} \geq \underbrace{(1-p^F)(Y_j^{IF} - w_j^{IF} + \lambda BF_j^F)}_{\text{Net revenues income informal, not detected}} + \underbrace{p^F(Y_j^{IF} - w_j^{IF} + \lambda BF_j^F - PenF_j)}_{\text{Net revenues informal, detected}} \quad (2)$$

- 소비자는 발각되어 벌금을 낼 확률을 고려하여 공식 부문 혹은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지를 결정함.
-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어떤 근로자와 기업들을 감시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공식 부문의 경계를 정의함.
- 주어진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개인과 기업들은 법적 지위에서 오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비공식적으로 활동할지 공식적으로 활동할지를 선택함.
 - 과도한 규제와 비용이 존재할 시, 생산성이 낮은 개인과 기업들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발적으로 비공식성을 선택.
-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부효과를 낳아 개인과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공식 부문이 크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이윤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야 하며 이는 비공식 부문에 참여할 유인을 높임.
 -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커지면 정부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공공 서비스 무임승차와 탈세가 용납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능.

Box 1. 비공식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

- 세제는 비공식적 활동에서 오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
 - 근로 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노동 공급 유인을 감소시키며, 그 정도는 개인의 위험 기피도(risk aversion)에 따라 달라짐.

- 기업이 내는 연금 부담금은 기업의 노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윤에 대한 높은 세금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과소보고할 유인을 초래.
- 소비세가 높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화나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비가 이전할 수 있음.
- 소득세와 소비세가 높을수록 가구들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부문으로 이전함을 보여주는 실증분석들은 다수 존재.

□ 세금제도의 집행과 거버넌스의 우수성

- 세금 제도의 감시와 집행은 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공공 기관의 역할 수행을 나타내는 거버넌스의 우수성과 신뢰 또한 비공식 경제에 영향을 미침.

□ 규제는 경제활동의 공식성으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킴.

- 규제는 비용과 장벽을 높임.
- 고용보호법은 기업이 경제 변동에 대해 고용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 고용보호법이 엄격할수록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실증분석들이 있으나, 고용법의 강력한 집행은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법제도,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의 접근성은 공식 부문 활동에서 오는 이득을 증가시킴.
 -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공식 부문에서의 활동을 더 매력적이게 할 수 있음.
 - 반면, 비공식 부문의 기업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재산은 법에 의해 잘 보호받지 못함.
-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을수록 실질 한계세율이 높아

지고 순소득이 낮아지므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할 유인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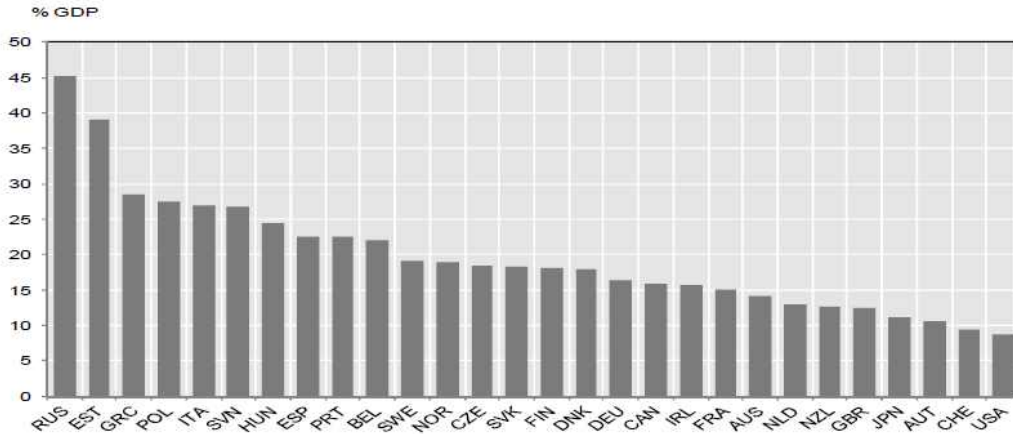
4. 비공식성 측정

- 비공식 경제 활동의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그 범위(비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 거래량 등)와 강도(시간수, 거래의 가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장 : 광의의 비공식성 추정(broad measures of informality)

- 모형추정 방식은 비공식 경제를 “비관측” 변수로 간주함.
 - 통화량 수요 방법(currency demand method)은 세제나 규제에 따라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변한다는 가정 하에 현금거래의 일부를 비공식 경제에 배당함.
 - 전기 소비 방법(electricity consumption method)은 경제활동과 전기 소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식 집계된 GDP 성장률과 전기 소비에 근거하여 추정된 GDP 성장률의 차이로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
 -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MIMIC) method*은 비공식 경제를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간주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공식 경제가 가져오는 결과들로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을 추정.
 - 모형에 근거하여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많은 나라에 대해 나와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추정된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Figure 2.1: The size of the informal economy based on the currency demand method, average 2001/02¹



1. Estimates for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Russia, Slovenia and Slovak Republic based on the MIMIC approach instead of the currency demand approach.
Source: Feld and Schneider 2010

국민 계정에서의 비관측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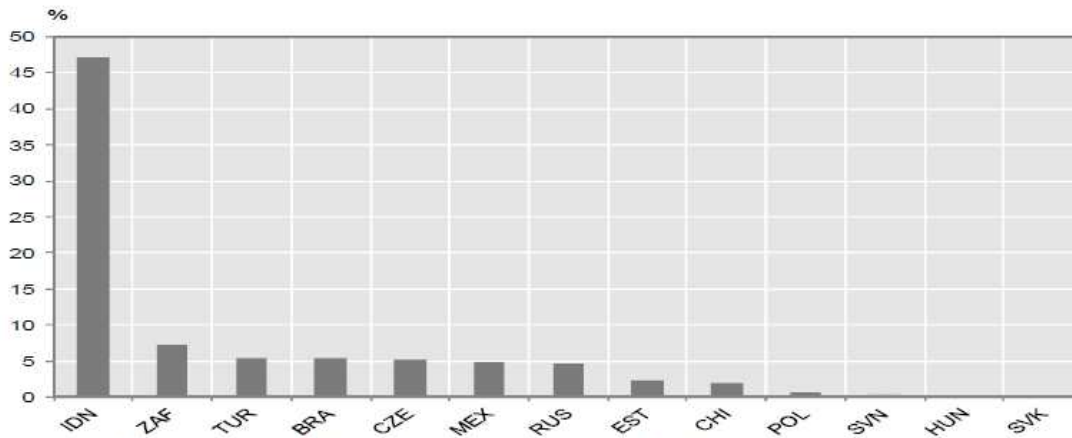
- “비관측 경제”는 GDP에 포함되어야 하나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이거나 자료 부족으로 누락된 경제활동을 지칭.
- 비관측 경제 추정치들은 비공식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으나, 각국 통계청들은 이러한 추정치들을 일반적으로 내놓지 않으며, 내놓는다 하더라도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국가간 비교가 힘든 점이 있음.

제2장 : 비공식성의 대리지표들(proxy measures)

직접적인 써베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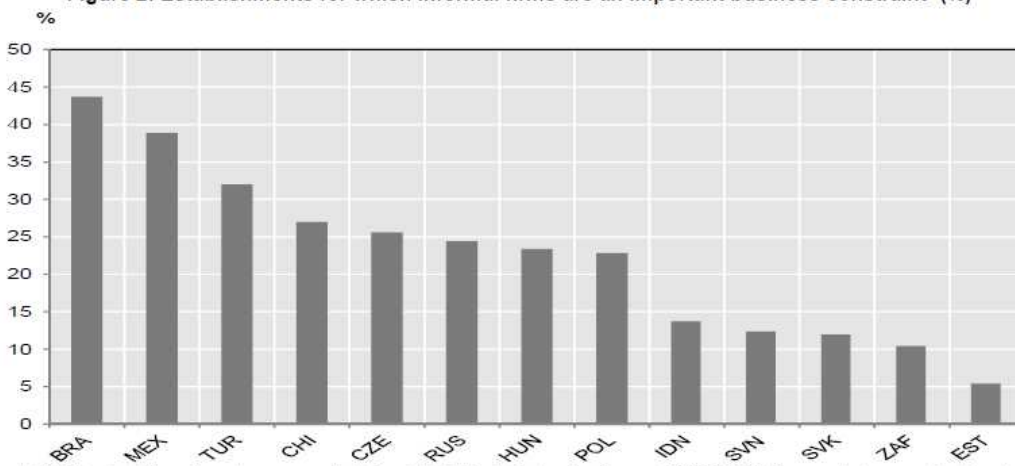
- 개인이나 기업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미시 써베이들이 있음.

Figure 1: Establishments not formally registered when they began opera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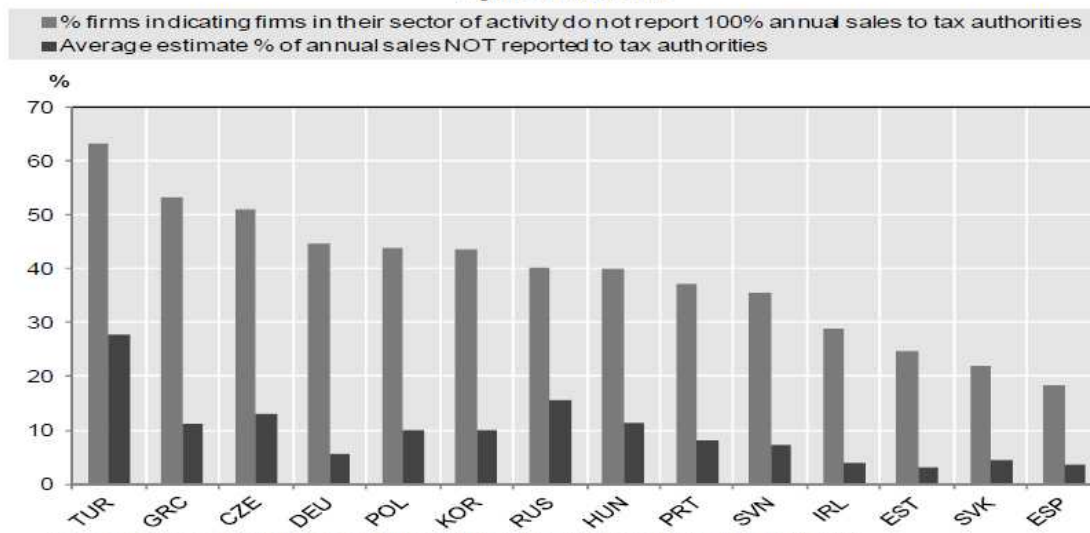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2006-2009)

Figure 2: Establishments for which informal firms are an important business constraint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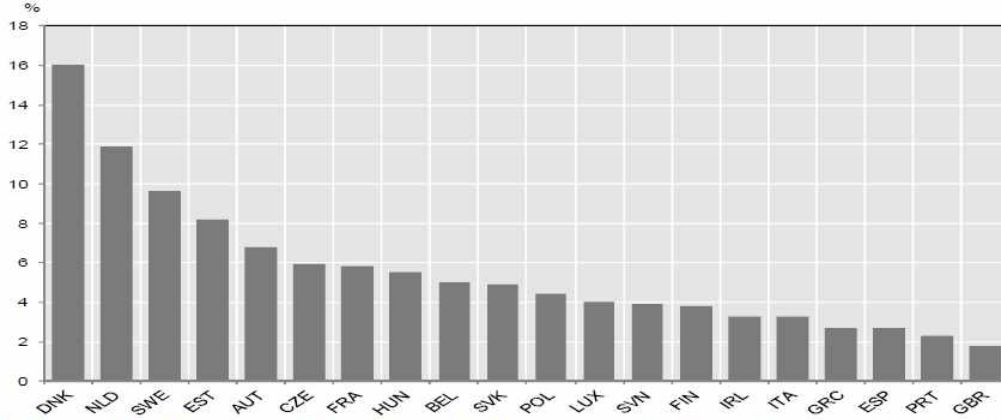
1. OECD calculations based on survey data from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2006-2009). Respondents are asked to rate to what extent informal sector competitors are an obstacle to the firm operations, the estimate is calculated as the % of firms that answer major and severe constraint

Figure 3: Tax evasion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EBRD-World Bank BEEPS Survey (1999, 2002, 2004,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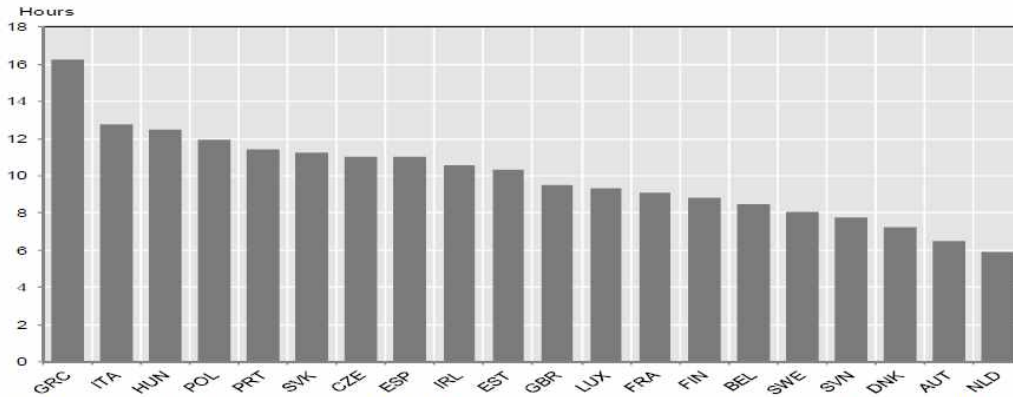
Figure 4: Share of individuals who carried out undeclared work: European OECD countries¹



1. The chart shows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yes" to the following question: "Did you yourself carry out any undeclared activities in the last 12 months for which you were paid in money or in kind? Herewith we mean again activities which were not or not fully reported to the tax or social security authorities and where the person who acquired the good or service was aware of this."

Source: Eurobarometer,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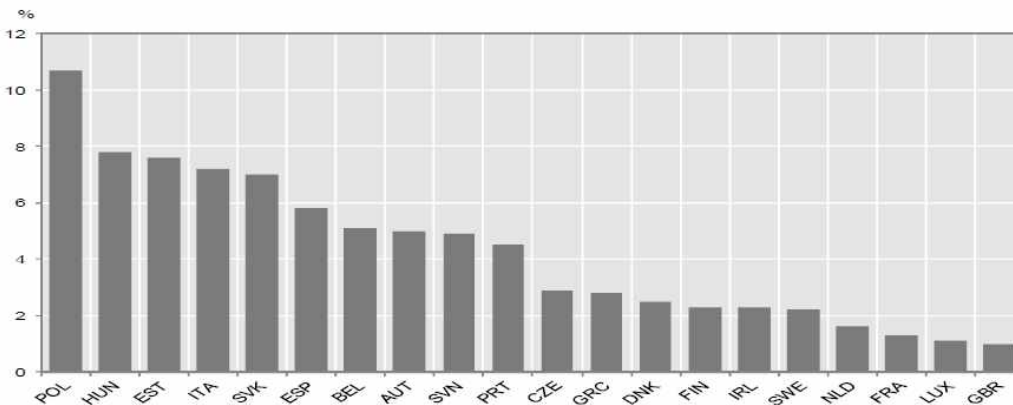
Figure 5: Hours per week in undeclared work: European OECD countries¹



1. Respondents are asked: "In the weeks in which you worked on this activity, how many hours per week on average did you spend on this activity?", and answers are group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1-5 hours, 6-10 hours, 11-20 hours and at least 21 hours. The overall estimate is constructed as the share of respondents in each category multiplied by the minimum number of hours in each category (i.e. 1 for the 1-5 hour category, 6 for the 6-10 hour category etc) summed across all categories. Since the highest category is top-coded, the estimat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inimum number of hours spent in undeclared work.

Source: Eurobarometer, 2007.

Figure 6: Share of respondents whose employer paid part or all of wage in undeclared cash in past 12 months: European OECD countries¹



1. The chart shows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yes" to the following question: "Sometimes employers prefer to pay all or part of the regular salary or the remuneration for extra work or overtime hours cash-in-hand and without declaring it to tax or social security authorities. Did your employer pay you all or part of your income in the last 12 months in this way?"

Source: Eurobarometer, 2007.

- 자영업자들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자영업자 비율을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공식 부문 경제활동을 상당량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 OECD 유럽 국가들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용주가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을 이용하여 비공식 고용을 측정한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업에서 얻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추기 쉬우며 실제 부업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공식 부문 활동이 많다는 점이 보고됨.
- 경제활동인구 중 불법 이민자의 비율로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자료는 몇몇 OECD 국가들에 대해서만 존재함.
- 개인과 기업의 세금보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소득을 잘못 혹은 과소보고하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음.

제3장 : 다양한 비공식성 측정치에 대한 평가

-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이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니는 단점들이 있음.
 - 추정치들이 포괄하는 국가들의 범위가 제한적임.
 -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한 시점에서의 추정치만 있어 시계열 변동이 없음.
 - 비공식 경제의 대리 지표들은 비공식 부문 활동 뿐 아니라 공식 부문 활동도 포함하여 측정오차가 존재.

Table 2: The size of the informal economy based on various sources

Country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EBRD-BEPPS Survey				Eurobarometer Survey 2007					National sources	OECD		ESS
	Participation ¹ % establishments not formally registered when began operations	Participation % of establishments without a checking or a savings account	Participation % of establishments for which informal firms are an important business constraint ²	Participation % firms indicating firms in their sector of activity do not report 100% annual sales to tax authorities	Intensity Average estimate % of annual sales reported to tax authorities	Participation % firms indicating firms in their sector of activity do not report 100% workers to tax authorities	Participation Average estimate % of workers reported to tax authorities	Participation Know someone who works without declaring income	Participation Bought goods and services embodying undeclared work	Participation Employer paid part or all of wage in undeclared cash in past 12 months	Participation Carried out undeclared work in past 12 months	Intensity Estimated minimum hours per week in undeclared work	Participation Share of multiple job holder	Participation Legal employed immigrants over total employment (%) ³	Participation Share of self employed in total employment (average: circa 1995 to latest) (%)	Participation Share of workers without an employment contract (%)
Australia	--	--	--	--	--	--	--	--	--	--	--	5.5	--	--	--	
Austria	--	--	--	--	--	--	--	42.1	22.6	5.0	6.8	6.5	4.2	1.3	16.6	10.1
Belgium	--	--	--	--	--	--	--	55.8	22.8	5.1	5.0	8.4	3.7	1.1	17.0	8.0
Canada	--	--	--	--	--	--	--	--	--	--	--	5.2	--	--	10.3	--
Chile	2.0	3.7	26.9	--	--	--	--	--	--	--	--	--	--	--	--	--
Czech Republic	5.2	3.2	25.6	51.1	85.9	39.5	88.6	44.2	22.1	2.9	5.9	11.0	2.1	--	17.1	2.6
Denmark	--	--	--	--	--	--	--	64.1	36.9	2.5	16.0	7.2	10.3	--	6.9	12.7
Estonia	2.2	1.8	5.5	24.7	96.9	26.4	93.5	34.4	17.4	7.6	8.2	10.3	4.0	--	8.3	5.6
Finland	--	--	--	--	--	--	--	35.7	11.9	2.3	3.8	8.8	4.1	--	12.2	1.8
France	--	--	--	--	--	--	--	47.2	13.4	1.3	5.8	9.1	3.1	0.7	9.4	8.4
Germany	--	--	--	44.7	94.3	42.1	94.1	33.1	7.0	1.0	2.1	8.1	2.9	--	10.4	4.2
Greece	--	--	--	53.2	89.0	32.1	93.1	45.1	21.0	2.6	2.7	16.2	3.0	4.4	38.3	38.9
Hungary	0.0	1.4	23.4	40.0	88.7	29.0	91.6	45.2	17.3	7.8	5.5	12.5	1.8	--	14.9	4.4
Iceland	--	--	--	--	--	--	--	--	--	--	--	--	12.6	--	16.6	25.8
Ireland	--	--	--	28.8	96.2	30.4	95.8	31.1	10.9	2.3	3.3	10.5	2.1	--	17.9	39.3
Israel	--	--	--	--	--	--	--	--	--	--	--	--	--	--	12.8	--
Italy	--	--	--	--	--	--	--	45.7	24.7	7.2	3.3	12.8	1.4	2.0	26.9	--
Japan	--	--	--	--	--	--	--	--	--	--	--	--	--	--	15.7	--
Korea	--	--	--	43.7	90.0	28.9	93.0	--	--	--	--	--	--	--	35.6	--
Luxembourg	--	--	--	--	--	--	--	46.8	15.4	1.1	4.0	9.3	1.1	--	7.2	6.8
Mexico	4.9	44.3	38.9	--	--	--	--	--	--	--	--	--	--	--	--	--
Netherlands	--	--	--	--	--	--	--	66.2	31.8	1.6	11.9	5.9	6.3	1.0	14.4	9.3
New Zealand	--	--	--	--	--	--	--	--	--	--	--	--	5.0	--	8.3	--
Norway	--	--	--	--	--	--	--	--	--	--	--	--	7.7	0.5	7.6	11.2
Poland	0.7	4.6	22.9	43.9	90.0	40.0	89.7	44.5	9.5	10.7	4.4	11.9	7.9	--	26.4	6.6
Portugal	--	--	--	37.3	91.8	25.1	95.6	26.5	11.4	4.5	2.3	11.4	6.3	1.6	20.3	14.6
Russia	4.7	3.4	24.4	40.3	84.5	28.9	89.3	--	--	--	--	--	--	--	--	7.6
Slovak Republic	0.0	77.1	12.0	22.0	95.6	21.4	94.9	40.7	22.3	7.0	4.9	11.3	--	--	9.4	3.3
Slovenia	0.4	0.4	12.3	35.6	92.8	39.1	92.1	51.8	22.4	4.9	3.9	7.8	3.0	--	18.2	10.6
Spain	--	--	--	18.3	96.3	12.5	97.9	26.3	6.8	5.8	2.7	11.0	2.2	1.4	15.9	10.0
Sweden	--	--	--	--	--	--	--	57.6	29.1	2.2	9.6	8.1	8.5	0.4	6.2	2.5
Switzerland	--	--	--	--	--	--	--	--	--	--	--	--	6.3	--	--	5.8
Turkey	5.5	5.9	31.9	63.1	72.3	56.9	76.6	--	--	--	--	--	2.6	--	--	43.5
United Kingdom	--	--	--	--	--	--	--	22.3	10.6	1.0	1.8	9.5	3.6	1.0	13.3	21.8
United States	--	--	--	--	--	--	--	--	--	--	--	--	5.0	3.2	7.1	--
Brazil	5.4	2.1	43.6	--	--	--	--	--	--	--	--	--	--	--	--	--
China	--	--	--	--	--	--	--	--	--	--	--	--	--	--	--	--
India	--	--	--	--	--	--	--	--	--	--	--	--	--	--	--	--
Indonesia	47.2	31.1	13.7	--	--	--	--	--	--	--	--	--	--	--	--	--
South Africa	7.3	1.6	10.4	--	--	--	--	--	--	--	--	--	--	--	--	--

1. Participation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firms and individuals participate in informal activities. Intensity measures how much firms or individuals participate in informal activities.

2. Estimates for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Russia, Slovenia and Slovak Republic based on the DYMIMC approach instead of the currency demand approach.

3. OECD calculations based on survey data from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respondents are asked to rate to what extent informal sector competitors are an obstacle to the firm operations, the estimate is calculated as the % of firms that answer major and severe constraint.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2006-2009), EBRD-World Bank BEPPS Survey (1999, 2002, 2004, 2005), Eurobarometer 67.3, 2007, Eurostat, National sources,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09),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0), OECD STAN Database and European Social Survey (ESS).

의제에 대한 논평

<논평요약>

- ①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데이터 상황 요약에 동의하는지?
- ② 예상되는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국의 프로젝트 제안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 ③ 제안서에 유용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①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데이터 상황 요약에 동의하는지?

- 사무국의 상황요약은 기존 문헌과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국가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경제 부문별 자료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② 예상되는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국의 프로젝트 제안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 이전에 일관성 있는 비공식 경제의 개념에 대한 정의 확립이 필요.
- 비공식성 추정치들 간의 상관관계에 불일치(Annex 2)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써베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부업 보유 여부를 조사할 때 ILO의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직업을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반복 조사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어 정책 결정에 도움.

-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각국의 데이터 수집과의 협동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비공식 경제활동 패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가내 혹은 국가간 이민은 비공식 부문의 고용과 생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예, 농업 부문).

장기적으로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의 빈곤과 관련한 요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③ 제안서에 유용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제안서의 내용은 모두 비공식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 제안서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임.

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재정 건전성 강화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공식적 과세기반에서 제외된 비공식 부문 경제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단기적으로는 비공식 부문의 결정요인(drivers)들과 영향(consequences)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별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제안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비공식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
 - 아국 대표와 헝가리 대표는 이민이 비공식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터키 등 일부 대표들은 비공식 부문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함을 강조
 - 그리스 대표는 세금 부과와 사회기반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공식과 비공식 부문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

- 다수 회원국들이 단기적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추가적인 기여(value added)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중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건설적인 방법론을 제안
 - 아국 대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파악률을 높인 정책사례를 소개하며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측정하기 힘든 비공식 부문의 대리 지표들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항목들을 써베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기
 - 헝가리 대표는 비공식 부문을 측정하는 지표 중 모든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세부지표가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비공식 부문을 측정할 때 수입 측면보다 지출 측면의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스웨덴 대표는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언급

- 한편, 다수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 스위스 대표는 자국의 예를 들어, 법집행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낮은 세율과 규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면서 각 국가별 사례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
 - 멕시코 대표는 비공식 부문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국의 자영업자들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비공식 부문에의 참여를 측정하기에 좋은 지표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

Round 3~4. The 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Who Loses(and Gains) from Macroeconomic Shocks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분담: 거시경제 충격의 수혜자와 피해자)

의제 요약

1. 개요

-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다양한 거시경제 충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거시경제 충격이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특성과 지속기간, 그리고 충격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짐.
 - 거시경제 충격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위험분담을 통해 충격이 어떻게 분산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위험분담 메커니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 및 DSGE 모형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분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질수 있음.
 -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 거시경제 위험을 국가간에 분담하는 메커니즘
 - 국가내 개인간 위험분담 메커니즘: 한 국가내에서 경제주체들간에 거시경제 위험요인을 분담하는 메커니즘
 - 국가간 시계열 자료 분석 결과, 거시경제적 충격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근로소득 과세 체계, 실업 급여, 최저임금 등 관련 제도에 따라 충격 발생 시 분배에 대한 영향이 달라짐.

- 소득 위험분담 제도는 실업 급여, 고용보호법, 최저임금, 강성 노조를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제도와 자유로운 생산물 시장, 낮은 조세 격차(tax wedge) 등의 ‘재분배 촉진’ 제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발달 여부에 따라 4가지 “모델”로 분류될 수 있음.
- 유럽 대륙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를 통해 소득 위험의 분담을 추구하며, 위기 발생시 청년층의 소득 보호에 주의를 기울임.
- 영어권 국가와 아시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재분배 촉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단기적인 소득 위험 분담이 미흡함.
-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계가사회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소득 위험을 분배하려고 함.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높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함.

2.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

- 거시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분담된 국제적 위험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국제적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발전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충격에 대한 각국의 취약점이 서로 달라 국가간의 위험공조에 대한 유인도 다를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개방도로 인해 다양한 충격에 대해 취약할 수 있음.
 - 국제조약 집행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각국 정부가 국제적 위험분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

안의 범위를 한정하게 됨.

- IMF의 지원 등 일부 국제적 위험분담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발달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한편,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국제 위험분담의 발전은 매우 미흡함.

- 예를 들어, 민간의 핵에너지사용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공공보험 제공 시도는 매우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위험분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음.

○ 특정 사건(원자재 가격 혹은 자연재해 발생 등)과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의 활성화

○ 특정 거시경제변수(GDP 성장률 등)와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의 활성화

□ 각국의 경제구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격을 최소화하고 충격에 따른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수 있음.

○ 국제적 위험 분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역 개방, 환율, 실질임금의 유연성, 인적자본의 국경간 이동, 해외직접투자 개방, 자국통화표시로 구성된 부채구조, 국부펀드 등이 존재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재정 및 금융 위기에 따른 충격은 경상수지의 조정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외국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경우 거시경제 위험의 분산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충격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발생한 경우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충격의 발생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단기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함으로써 경기역행적 정책반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신속한 가격 및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충격의 여파를 감소시킴.

3. 국가내 경제주체를 위한 위험분담 메커니즘

제1장 : 개인간 위험분담 및 보험 메커니즘

(민간보험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 민간보험시장이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
 -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및 사건의 발생에 따른 손실의 확률적 분포에 대한 높은 정확성
 - 위험의 크기가 민간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함.
- 민간보험의 한계로 인해 정부주도의 공적보험이 선호될 수 있음.
 - 공적보험의 책임 한도는 민간회사들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광범위함.
 - 기초건강보험과 같은 경우 공적보험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유리함.

(민간 및 공적보험과 불완전 보험시장)

- 거시경제적 충격 발생시, 위험분담 메커니즘은 보험서비스의 제공자와 보험의 대상(근로소득, 자본소득, 부)에 따라 달라짐.

- 근로소득: 실업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음.
 -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보험 혹은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임.
- 자본소득: 자본소득은 일정부분 민간시장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

Possibilities to protect wealth, wage and capital income against different macroeconomic shocks
(Darker shades indicate more developed possibilities)³

Shocks	Wealth		Wage income		Capital income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Natural disaster (capital stock)						
Exchange rate						
Long and short-term interest rates						
Inflation						
Technology (structural change)						
Commodity price						
Labour supply	NR	NR				
Fiscal						
Longevity	NR	NR				
Financial crisis (risk aversion)						

NR – Not relevant

-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능력은 금융지식 및 보유자산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저소득 가계는 대체적으로 위험회피 능력이 부족한 바, 거시충격에 대한 민간부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작음.
- 민간부문에서의 위험분담은 그 범위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계약 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가입으로 위험회피가 가능하더라도 보험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

- 다수의 개인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으로 인해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예컨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회피가 대다수의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실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보험시장은 자연재해 혹은 테러 등과 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이 나타나는 부문에서 여전히 불완전함.
 - CDS시장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상품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담보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위험을 확대시키는 등 시장불완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민간보험시장 및 공적보험 외에 개인적(민간) 차원에서의 위험분담 메커니즘이 존재함.
 - 대가족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재분배할 수 있고,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분담(job sharing) 형태를 채택하여 기업의 경영 악화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러한 예임.

제2장 :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규제 혹은 개혁을 통한 시장실패의 조정)

- 보험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은 위험분담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
 - 구조개혁은 보험 및 재보험시장에서 대규모의 자본완충이 가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월하게 추가적인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 재보험회사가 재난관련 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규모의 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임.

- 정보 문제(Informational problem)는 보험 계약의 표준화를 강화하여 (보험료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예컨대, 고령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사망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개인의 퇴직 연금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제공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정부주도의 시장실패 조정)

- 민간부문에서 재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민간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부주도의 공공 재보험제도는 차선택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시 큰 손실이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서 부분적인 공적보험은 불가피하게 필요함.

제3장 : 위험분담의 방식

(위험분담 방식에 대한 기준)

- 시장에서 결정된 분배 결과가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배 결과의 계층간 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위험분담 방식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기 어려움.
-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위험에 따른 수혜자 혹은 위험을 악화시킨 계층 또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비용분담을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책임 범위 내에서 어떻게 거시충격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선호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 예컨대, 경제충격으로부터 적응이 어려운 계층이나 노동공급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더 많은 보호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음.

(위험분담의 정치 경제적 측면)

- 위험분담 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담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영향력이 강한 계층은 충격 발생시 직접적 또는 제도의 사전적 설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4. 거시충격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가계를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거시 경제적 충격이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측면이 위험 분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환율,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금리, 생산성, 금융위기, 재정 위기의 거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단기적, 중기적인 상대적 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 분석 대상 가계는 소득, 자산, 교육정도, 성, 나이에 따라 구별하고, 특정 충격의 경우 채무 상태, 주택 소유 여부, 자본 소득의 정도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함.

제1장 : 그룹별 실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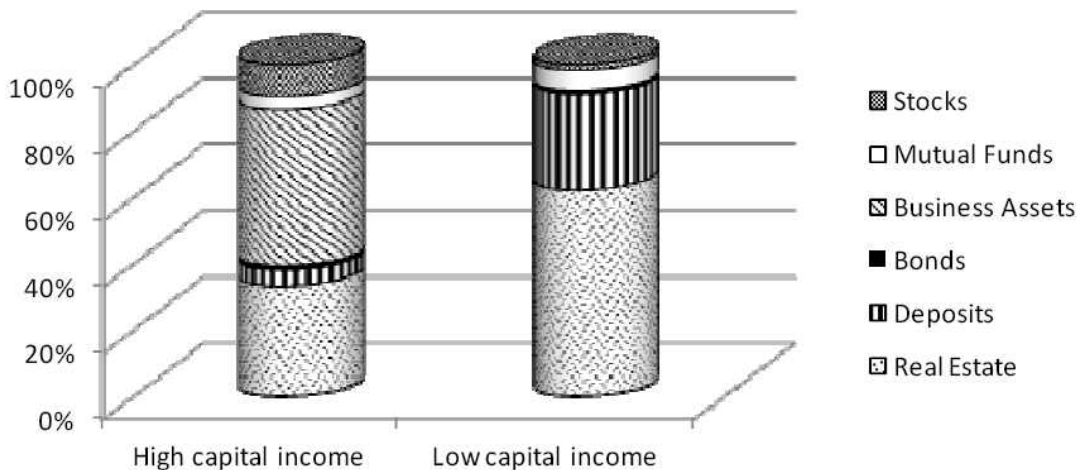
(거시충격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미치는 영향)

- 거시충격이 한 국가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무역 상대국에 전가되고 있는지 파악함.
- 환율과 상품가격의 충격은 경상수지의 변동을 가져오고,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며, 재정 건전화 또한 수입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거시충격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거시충격은 자산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부(wealth)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
 - 금융위기는 대개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이 경우 금융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구성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거시충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는 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바, 자본 소득의 비율이 높은 가계의 경우에 이러한 충격에 의한 영향을 덜 받음.
 - 이는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자산포트폴리오에 비즈니스 자산과 주식의 비중이 큰 반면, 기타 가계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A. Wealth portfolio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s with high versus low capital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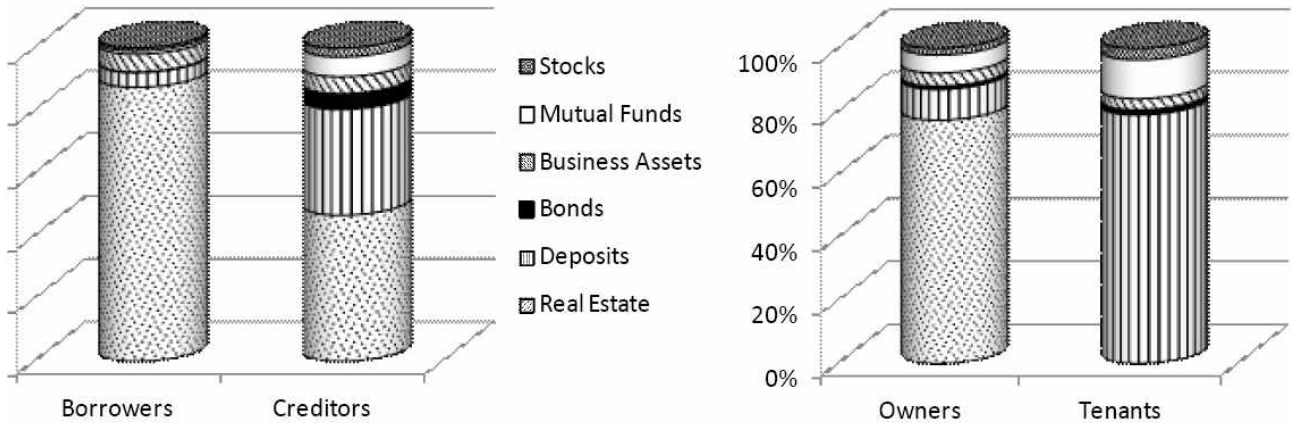


-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는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의 충격에 영향을 덜 받음.
 - 이는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일수록 레버리지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순채무 상태인 가계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대개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거시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들의 레버리지와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임.

C. Wealth portfolio differences for borrowers versus creditors and owners versus tenants



(거시충격이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전반적으로 부정적 거시충격은 긍정적 거시충격보다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부정적 거시충격은 거의 공통적으로 실업과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격 발생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함.
- 금융위기 충격의 경우, 최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낮추고, 빈곤률을 높임.
 - 임금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계는 금융위기에 타격을 크게 받고, 임금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소득도 높기 때문임.
- 재정 건전화 충격은 빈곤을 증가시키며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이전지출이 삭감될 경우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며, 재정 긴축기에 빈곤층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

- 다만, 재정정책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집행되므로 재정정책기조가 항상 특정한 분배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 이자율 상승 충격은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 높이며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킴.
 - 이는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경우 주식 등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 기타 가계의 경우 예금 등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수익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인플레이션 충격은 견인 요인과 정도가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재분배 효과도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강건한 (robust)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충격은 저소득 계층과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킴.
 - 빈곤층의 경우 평균 이하의 교육 수준을 받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으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실업의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지출 중 원자재 관련 소비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구매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은 기업의 이윤을 위축시켜,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킴.
- 통화가치 하락 충격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통화가치 상승 충격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킴.
 -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산업의 자본 소득의 감소는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감소로 이어짐.

제2장 : 제도의 역할

(정부의 규모, 복지 시스템, 과세 구조)

- 더욱 발전된 복지 시스템, 관대한 급여 실업급여는 거시충격이 취약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정책 조정(fiscal adjustment), 특히 이전지출과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replacement rate) 증가는 빈곤을 제한하였고, 더욱 관대한 실업 급여는 장년층(55~65세)의 소득에 대한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손실을 약화시켰음.
- 또한 실업 급여는 특정 그룹의 노동자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줌.
 - 금융위기, 통화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의 거시충격 발생시 더 높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은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실업 급여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노년층 노동인구의 실업이 증가하였음.
- 근로세의 조세격차(tax wedge)가 클수록 노동시장 밀착도가 낮은 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
 - 충격 발생시, 한계적 노동자 계층(청년층 및 노년층)이 높은 조세 격차하에서 상대적 성과가 악화됨.
 - 누진적인 과세체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빈곤의 감소를 확대시킴.

(노동시장 제도)

- 엄격한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은 부정적 충격 발생시,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고용은 악화시키나 노년층의 고용은 개선시킴.
 - 이자율 상승 충격시 자본 소득 비중이 낮은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높이고, 재정 정책 조정시 빈곤의 증가를 약화시킴.
 -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 충격시 50세 이상의 실업은 완화되나 20

대의 실업은 증가

- 최저임금의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통화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빈곤층의 소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청년층의 실업을 악화시킴.
 - 이는 저임금 계층의 실질 임금 저하가 최저임금으로 부분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대로, 최저임금은 금융위기와 이자율 상승 등 충격 발생시, 저숙련 임금의 유연성의 저하를 야기하며, 상대적으로 20대의 고용이 악화됨.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자본 소득이 높은 가계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최저임금의 포괄 범위가 높을수록 증가함.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국가에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생산성 악화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한, 자본 소유자에게 불리함.
- 강성한 노동조합은 빈곤층의 소득점유율 하락 효과를 줄이고, 부유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를 제한하면서 취약계층에 보험적 기능을 함.
- 단체교섭권의 포괄 범위가 넓을 수록, 거시충격 발생시 기업이 이윤의 큰 감소를 발생시켜 자본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감소를 확대시킴.
- 임금협상이 중앙집권적일수록 재정책대시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를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 손실을 완화시킴.

(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의 규제가 엄격할수록 거시충격의 청년층과 빈곤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확대됨.
 - 상품시장 규제가 완화될수록 산업 및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가 신속히 일어나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활발해지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됨.

(대외 개방)

- 경제의 대외 개방은 청년층과 빈곤층에 이익을 가져다줌.
 - 무역 개방 비율이 높거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가 적을 수록 금융위기와 재정 건전화, 이자율 상승시 청년의 고용 상황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침.
 - 또한 무역 개방도는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를 확대시킴.

(금융산업의 발달)

- 금융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고, 따라서 노동시장 밀착도가 낮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금융위기와 금리 상승 충격 발생시 담보에 미치는 영향(collateral effect)을 통해 고소득 계층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금융산업이 발달할수록 통화가치 하락 충격시 소득불평등이 심화됨.
 - 금융산업의 발전은 통화가치 상승기에 주택과 같은 비교역재에 대한 신용공급과 과잉투자를 확대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조정 폭이 더욱 커지고, 따라서 빈곤층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임.

제3장 : DSGE 모델을 이용한 분석

- 두 가지 유형의 이질적 경제주체(heterogeneous agents)를 가정한 모형
 - 모형 1: 채권보유자(nominal bond holder)와 주식보유자(real equity holders)
 - 채권보유자는 저축 수단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명목자산보유자(nominal asset holders)이며 채권의 이자소득을 취득
 - 주식보유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기업의 지분)을

매입(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신용제약이 발생)하는 실질자산보유자(real asset holders)이며 배당소득을 취득

○ 모형 2: 자본 소유자(capital owners)와 노동자(workers)

- 자본소유자는 기업의 지분(주식)을 보유(실질자산보유자)하며 배당소득을 취득하는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하는 등 신용제약이 존재
- 노동자는 명목자산보유자로서 노동력을 공급하며, 노동소득과 이자소득을 취득

□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충격과 제도 여건에 따른 결과를 분석

- 거시경제 충격: 생산성 상승 충격(productivity shock), 인플레이션 충격(inflation shock), 금융위기 충격(financial crisis shock : 금융시장의 위험회피도가 높아지면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 제도 여건: 금융시장 성숙도, 통화정책의 적극성, 노동시장 유연성(노동공급 탄력성), 상품시장 규제 정도, 임금 유연성

(금융시장 성숙도)

□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더 높을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정도는 더 커짐.

- 금융위기 발생시,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타격을 크게 받음.
 -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 보유자에게 이익이 되나,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주식 보유자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바,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담보가치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차입을 어렵게 하여 주식 보유자에게 불리함.
 - 금융위기 충격은 자산가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자본 소유자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노동자보다 타격을 크게 받음.
- 인플레이션 발생시,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이익을 얻음.

-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담보가치 변화에 대한 차입의 민감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투자와 경기 활성화 정도가 확대되어, 배당 소득이 증가하고 채무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주식 보유자가 이익을 얻음.
- 생산성 증가시 배당과 자산가격 및 담보물 가치가 상승하며, 주식 보유자와 자본 소유자가 이익을 얻음.

(통화정책의 적극성)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적극적일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정도 및 재분배 효과는 작아짐.
 - 금융위기 발생시 수반되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주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자산가격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켜 자본 소유자에게 유리함.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채권 보유자의 부의 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채권 보유자와 노동자에게 유리함.

(노동공급 탄력성)

-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충격에 대한 노동 및 자본소득간의 재분배 정도가 더 커짐.
 -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노동공급이 경직된 경우 자본을 더 많이 고용하며,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분배를 강화함.
 -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자본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강화됨.
 - 금융위기 발생시,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조정이 늦춰지며 투자와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강화됨.

(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 규제가 강할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 변수의 반응 정도는 더 작아지고 재분배 효과는 억제됨.
 - 생산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규제는 상품 생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따라서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며 기업의 차입과 투자를 낮춰 자본 소유주로의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킴.
 - 금융위기 발생시, 상품시장 규제는 생산 위축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로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됨.
 -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물시장 규제가 강할수록 재원배분이 어려워져 충격에 따른 생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임금의 유연성)

- 임금 유연성이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거시 변수의 반응 정도가 더 커지며 재분배 효과도 확대됨.
 - 금융위기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음.
 - 경직적 임금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수익을 감소하며 자산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담보가치 하락폭을 확대시켜 자본 소유주의 부채상환을 야기하는데, 임금이 경직적일 때 차입과 투자의 하락은 자본 소유주의 소득 감소를 촉진함.
 -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 자본 소유주가 이익을 얻음.
 - 담보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과 투자가 증가하며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임금 상승, 즉 생산 비용이 느리게 증가하며 자본 소유주의 상대적 소득을 높임.
 -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음.
 - 그 경로는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시와 유사하나, 실질 임금의 경직성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부합할 정도의 임금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재분배 효과가 확대됨.

제4장 : 분석의 결론

- 각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와 ‘재분배 촉진’ 제도 등 소득 위험분담 제도의 발달 여부에 따라 4가지 “모델”로 분류될 수 있음.
 - ‘사회적 보호’ 제도 : 실업 급여, 고용보호법, 최저임금, 노동조합 등
 - ‘재분배 촉진’ 제도 : 자유로운 생산물 시장, 낮은 조세 격차(tax wedge) 등

- 4가지 “모델”
 - “모델 1” : 유럽 대륙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 제도를 통해 소득 위험의 분담을 추구하며, 위기 발생시 청년층의 소득 보호에 주의를 기울임.
 - “모델 2” : 영어권 국가와 아시아의 OECD 국가들(일본·한국)의 경우 ‘재분배 촉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단기적인 소득 위험 분담이 미흡함.
 - “모델 3” :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계가사회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소득 위험을 분배하려고 함.
 - “모델 4”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가 모두 발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높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함.

- 각 모델은 장기적 효율성과 단기적 소득위험분담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상충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효율성과 공평성 목표가 보다 나은 상충관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분담 메커니즘에 존재하는 경제적·정치경제적 연관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낮은 조세격차(taxes wedges)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숙련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데에 따르는 고용 및 소득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위험분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 또는 임금교섭 범위의 확대 등 노동시장 내부자(labour-market insiders)를 보호하는 제도들은 상호 강화하는 성향이 있으며 ‘현상유지편향(status-quo bias)’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전반적으로는 각각의 위험분담 모형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특정 정책만을 별도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또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음).

<논평 요약>

- ① 본 보고서에 발견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위험분담 결과의 연결 관계가 신뢰할만한가? 위험분담과 위험분담 메커니즘에서 생략되거나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가?
- ② 국가별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대략적 특징에 동의하는가? 각국의 위험분담 “모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③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모델”이 내부적으로 일관적인가? “모델”의 개별적 요소에 대한 정책 개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④ 국가 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에 있어서 민간 보험의 역할에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위험분담에 대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 목표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 본 보고서의 결과가 Going for Growth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 ① 본 보고서에 발견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위험분담 결과의 연결 관계가 신뢰할만한가? 위험분담과 위험분담 메커니즘에서 생략되거나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가?
- 본 보고서의 분석은 대부분의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에 따른 위험분담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 및 제도를 충실하게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일부 실증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소득계층별 또는 자산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asset portfolio)의 차이가 Luxembuorg Wealth Study에 포함되는 4개 국가들의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거시경제 충격이 부(wealth)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본 보고서의 Box 8과 다른 모습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국가에서는 영향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Box 8에서는 “for wealthier agents capital income (as compared to labor income) represents a bigger share of their income”을 fact로 전제하고 있는데,
- 한국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부유층의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중이 작을 수 있음을 시사

(%)

가구특성	자산총액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저축액				전 세 증 금	월 보	거 주 택	토지	기타 ¹⁾			
	적립 식		목도투 자									
전체	100.0	21.4	15.0	8.5	5.3	6.4	75.8	42.4	13.7	19.7	2.9	
순자산 5분위별	1분위	100.0	53.1	23.0	19.7	1.7	30.0	39.6	23.0	6.1	10.5	7.4
	2분위	100.0	47.4	20.1	15.7	2.9	27.2	46.8	38.4	4.2	4.1	5.9
	3분위	100.0	32.4	18.4	12.7	4.5	14.0	63.2	47.9	7.0	8.3	4.4
	4분위	100.0	24.3	17.5	11.0	5.4	6.8	72.4	50.3	9.8	12.4	3.3
	5분위	100.0	15.7	13.0	6.2	5.6	2.7	82.2	39.7	17.1	25.4	2.1

자료: 2010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본 보고서의 거시경제 충격의 소득 영향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가구특성	자산총액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저축액			전세 증금	월보	주 택	토지	기타 ¹⁾				
	적립 식	목돈투 자	기타									
전체				100.0	21.4	15.0	8.5	5.3	6.4	75.8	42.4	13.7
소득 5분위별	1분위	100.0	15.7	9.8	3.6	5.5	6.0	83.3	51.0	23.5	8.8	1.0
	2분위	100.0	20.0	11.8	6.6	4.2	8.2	77.7	49.3	18.5	9.9	2.3
	3분위	100.0	23.4	14.5	8.8	4.5	9.0	73.4	47.4	12.8	13.3	3.1
	4분위	100.0	23.6	15.5	9.6	4.8	8.0	73.4	44.2	12.7	16.5	3.1
	5분위	100.0	21.0	16.6	9.2	5.9	4.4	75.8	36.9	11.6	27.4	3.1
입주 형태별	자기집	100.0	13.8	13.8	7.5	5.2	-	83.6	53.4	15.1	14.6	2.6
	전세	100.0	53.4	17.6	10.9	5.3	35.8	43.1	-	7.4	34.6	3.5
	월세 등 기타	100.0	41.3	26.4	17.2	6.0	14.9	53.1	-	12.2	39.5	5.6

- 또한 한국의 경우 순자산이 작은 빈곤계층의 leverage가 매우 높고 주택보유자들보다 세입자들의 leverage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또한 본 보고서의 전제와 차이를 가지는 부분
- 따라서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영향도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부채비율(총자산/순자산=1+총부채/순자산)

소득 5분위 별	순자산		가구주 연령 대별	입주 형태별	
	1분위	5분위		자기집	월세 등 기타
1분위	108.8	1339.1	30세 미만	114.1	116.1
2분위	116.3	131.8	30~40 미만	124.6	
3분위	119.3	122.3	40~50 미만	123.3	
4분위	119.1	119.6	50~60 미만	119.6	
5분위	120.4	114.1	60세이 상	111.6	
				전세	124.9
				월세 등 기타	143.3

- 한편, 충격영향(shock impact)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DSGE 모형이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환율과 같은 대외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없음.
 - 2국(two country) DSGE 모형에서 대외충격이 거시위험분담 메커니즘에 따라 거시경제 변수 및 재분배(reallocation)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
 - 물론 이 경우에도 본 보고서의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직관(textbook intuition)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② 국가별 위험분담 메커니즘의 대략적 특징에 동의하는가? 각국의 위험분담 “모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경우 주요 소득위험분담 메커니즘의 특징을 영어권 국가 및 일본과 함께 두 번째 “모델”그룹으로 구분하여 ‘재분배 촉진’ 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에서 ‘사회적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는 것은 1998년 경제위기의 경험과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1998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대규모 실업 등 노동시장 붕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는 취업자 수의 조정보다 임금 삭감 등 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 관찰
 - 또한, 금번의 금융위기 하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위험분담 메커니즘인 근로분담(job sharing) 형태로 고용보호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유럽국가들에 비해 약하지만)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나 고용보호의 범위(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고용보호도 강화)도 확대되는 등 ‘사회적 보호’ 제도가 약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OECD의 고용보호지표는 우리

나라의 고용보호 정도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의 위험분담 “모델”에서 약점을 거론한다면, 이는 여성의 취업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임.

○ 금번 위기 하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③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모델”이 내부적으로 일관적인가? “모델”의 개별적 요소에 대한 정책 개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공정책들은 결국 재정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정책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강화될 경우 결국 재정건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보호적 메커니즘, 특히 고령층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증가할 전망

□ 물론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위험분담 정책들이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고령화와 더불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포괄범위가 60~70%에 불과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재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 따라서 개별적인 위험분담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④ 국가 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에 있어서 민간보험의 역할에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위험분담에 대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 목표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 본 보고서의 결과가 Going for Growth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 거시경제적 위험은 그 정의상 민간보험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도 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공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공공정책들 가운데 재정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고 민간 메커니즘을 통해 거시경제적 위험분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금융부문의 구조개선일 것임.
- 한국의 경우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분담을 중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거시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표 4]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잔액기준)

(단위: 조원, %)

구분		2004말		2005말		2006말		2010.6말 ¹⁾	
상환 방식	일시상환	130.3	(76.8)	121.1	(63.7)	103.4	(47.6)	106.3	(46.1)
	분할상환	39.5	(23.2)	69.1	(36.3)	113.7	(52.4)	124.2	(53.9)

주: 1) 조사대상 7개 은행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1)은 한겨레 신문 발췌.

[표 5]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구조

(단위: %, 조원)

	3년이하			3~5년	5~10년	10년초과	잔액
	1년이하	1~3년					
04년말	(60.1)	(12.2)	(47.9)	(15.7)	(3.5)	(20.7)	169.8
05년말	(43.9)	(15.4)	(28.5)	(16.7)	(5.1)	(34.4)	190.2
06년말	(30.0)	(11.1)	(18.9)	(12.6)	(6.4)	(51.0)	217.0
07년말	(24.6)	(8.6)	(16.1)	(10.2)	(7.2)	(58.0)	221.6
08년6말	(23.9)	(8.0)	(15.9)	(10.0)	(7.1)	(59.0)	229.5

자료: 금융감독원.

주요 토론 내용

- OECD사무국은 작년 10월의 EPC WP1에서의 논의 이후 진전된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향후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
 - 작년 10월에는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사전에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간 위험분담 기제와 국가내 개인간 위험분담 기제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적 위험분담 기제들이 거시경제충격의 분배효과에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해 연구한 OECD 사무국의 실증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
 - 다만, 동 보고서의 포괄범위가 거시경제는 물론 고용보호 및 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배논의를 아우르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본 회의에서도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 대부분의 대표들이 동 보고서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정제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

 - 먼저 동 보고서가 거시경제적 충격의 예방 또는 완화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험분담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프랑스 대표(lead speaker)는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네 가지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OECD의 보고서에서 각각의 방식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 (i)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자원 확보, (ii) 위기대응을 위한 자원 분산 체제 정립, (iii) 국가간 위험분담 및 위기전이 예방을 위한 체제 구축, (iv) 위험과 충격의 축소를 위한 예방적 대응

- 네덜란드 대표도 거시경제 충격의 예방 및 완화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IMF 대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상유동성지원 제도 등 거시금융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IMF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논의가 OECD 사무국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와 더불어 통화동맹이 경제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혹은 경제충격을 전염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됨.
- 호주 대표는 보고서의 관련 내용(Box 2.)이 균형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통화동맹이 개별 회원국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제약되는 경우 정책 유연성이 낮아져 경제충격을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ECB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통화동맹은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반대급부로서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통화동맹이 충격을 확대시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 OECD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석결과들이 이론적 직관에 부합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 아국 대표는 실증분석의 방법론과 대부분의 결과에 동의하지만, 소득계층별 또는 자산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동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국가들에게 분석결과 및 정책 시사점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Luxembuorg Wealth Study에 포함되는 4개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 브라질 대표도 아국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에서는 소득 및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거시경제적 충격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이탈리아 대표와 스웨덴 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성 및 청년층 노동시장의 차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고 지적

□ 이론모형의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아국 대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DSGE 모형이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2국(two country) 모형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스페인 및 브라질 대표도 거시경제적 충격의 대부분이 대외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 분석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아국 대표의 의견에 동의
- 스웨덴 대표는 보고서의 DSGE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대해 OECD 사무국은 보고서의 DSGE 모형은 학계에서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2국 모형의 안정성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위험분담 기제의 구분(사회적 보호 및 재분배 촉진)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구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정책적 준거(benchmark) 및 시사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 아국 대표는 사회적 보호기제와 재분배 촉진기제 간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이므로 정책적 시사점에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벨기에 대표와 노르웨이 대표는 두 가지 기제가 모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정책준거가 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포르투갈 대표와 스페인 대표도 고용보호법제(EPL)가 강할수록 효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정책적 준거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

Round 5. Policies to facilitate return to work

(고용회귀 촉진을 위한 정책)

의제 요약

-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인한 실업증가가 장기화되면서 인적 자원 후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악화가 우려
- 한국, 독일 등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한 국가에서는 고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생산성 저해와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희생을 담보해야 했음
- 가장 큰 우려는 이력현상임. 이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인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강화와도 뿔레야 뿔 수 없는 논의인 만큼 거시정책과도 같이 조망
- 2세션에서 OECD노동시장이 위기극복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고 3세션에서 고용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할 틀을 살핀 후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4세션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
 - ① 실업률이 높고, 실업자 진입퇴출과 같은 이동률이 낮으며, 장기실업률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지속우려가 높음
 - 위기전에는 EU에서 상대적으로 고실업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고실업이 매우 높아짐
 - ② 향후 2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에는 부족
 - ③ 지리적, 직업적 미스매치나 임금수준 미스매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단 위기이후 디플레우려가 사라져 가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임금을 정상화할 필요는 있음
 - ④ 노동력 퇴장의 위험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선 적으나, 고령자 여성 청년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증가

- 고령자 고용은 위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 소득감소 등이 은퇴를 연장시키는 효과.
- 가장 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경우 어느정도의 비중이 학교로 돌아가는지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고실업 국가에서 특히 disability benefit수급자가 구조적으로 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음.(비가역성이 높음)

□ 5세션은 고용회귀 촉진을 위한 정책들로 다음의 시사점 도출

- ①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노동시장 전망이 좋지않은 국가의 경우 노동수요 진작 정책이 단기적으로 필요함. 특히 사회보험부담금 등 기업의 tax wedge를 줄이는 정책이 고용 보조금이나 공공일자리보다 효율적임. (이미 몇몇국가 시행)
- ② 이력현상 방지를 위해서 직업훈련 확대, public employment service 확대 등 job mismatch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 직업훈련강화는 저숙련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바람직하지만 재정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추진에 어려움
- ③ 실업수당이 연장된 미국 등에서는 노동시장 여건이 확실히 나아지기 전까진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하는 것이 좋음. 이는 실업자의 장기빈곤층 진입을 막아주고 다른 더 경직적인 수당(disability pension 등)으로의 전입을 막아줌. 단 노동시장 개선되면 없어져야 하며, 구직활동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수급기간에 따라 감소해야 함.
 - 한편 과거에 커버되지 않던 인력에게 까지 실업수당이 확대된 핀란드 등 일부국에서는 요건만 만족한다면 실업수당이 연장 정책이 영구화 될 필요가 있음
- ④ 단기간 고용(shorttime working) 촉진을 위한 보조금이 많이 도입되었는데, 불가피한 면은 있었으나 줄어야 하며 특히 퇴장을 위한 built in incentive가 필요
- ⑤ 일부 국가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노동시장을 경

직화시켜 실업자 퇴장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 낳음. two tier 시스템을 낳은 고용보호법률(프랑스 등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은 실업률 변화없이 일부 취약계층만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 낳음. 게다가 위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다른 계층간 고용보호정책 차이를 줄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실업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강화를 낳는 효과

□ OECD의 정책권고 중 일부는 재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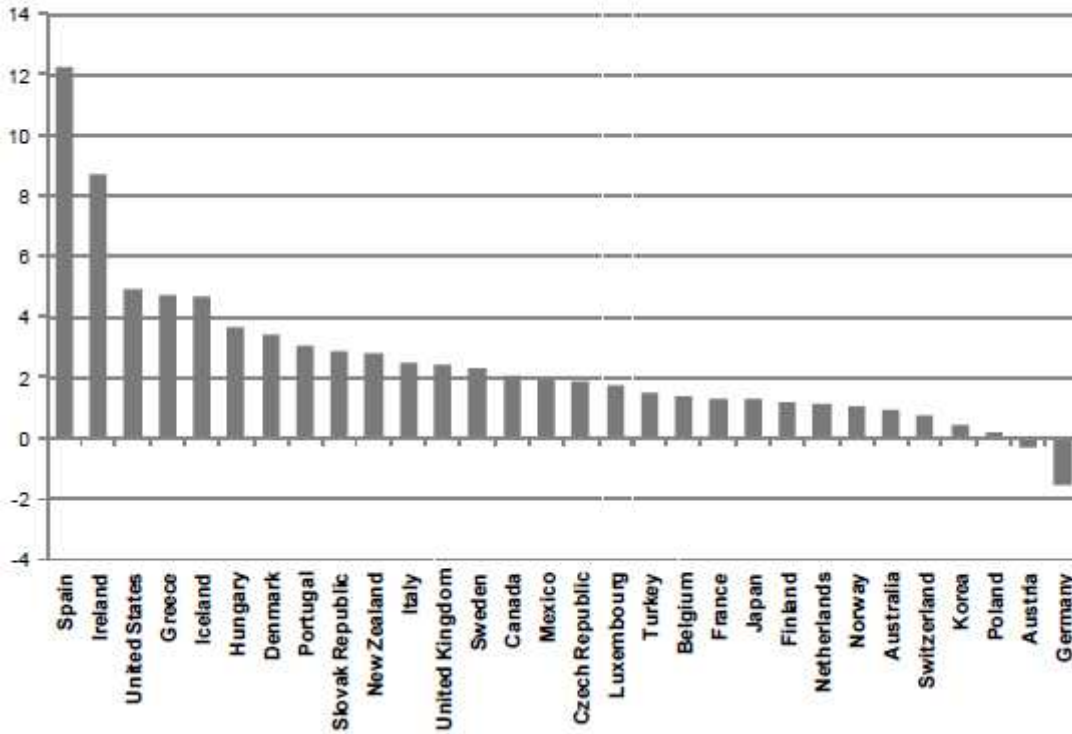
- 위기 전 실업수당, 각종 혜택 등의 커버리지를 넓히고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고 조건화 하는 노력은 위기 때 노동시장의 견디는 힘을 크게 해줌.
- 위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부분적 정책개혁을 오히려 확산시킨 측면이 있음.
- 금번 위기는 경제가 큰 충격을 겪을 경우 명목임금 경직성이 기대심리 불안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

II

위기극복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 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

Figure 2.3.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rates following the crisis
(2010Q3-2007Q3, change in percentage points)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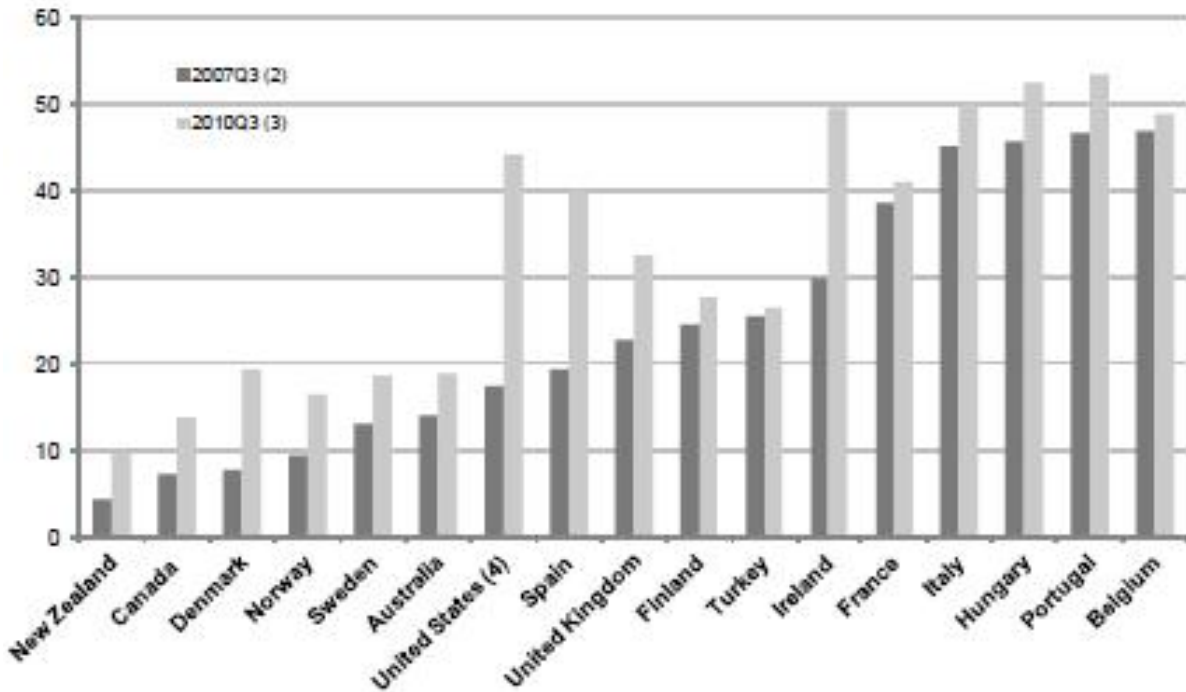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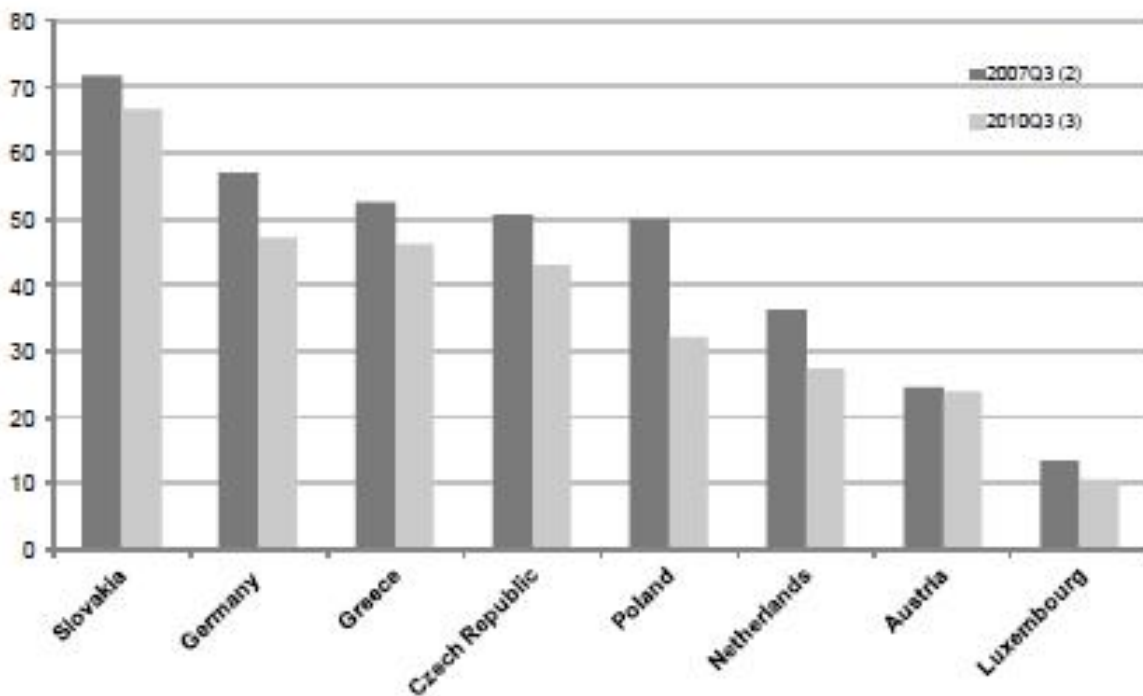
Figure 2.4. The incidence of long-term unemployment (LTU)

(Share of people unemployed for more than 12 months in total unemployment)¹

Panel A. Countries where the LTU has risen during the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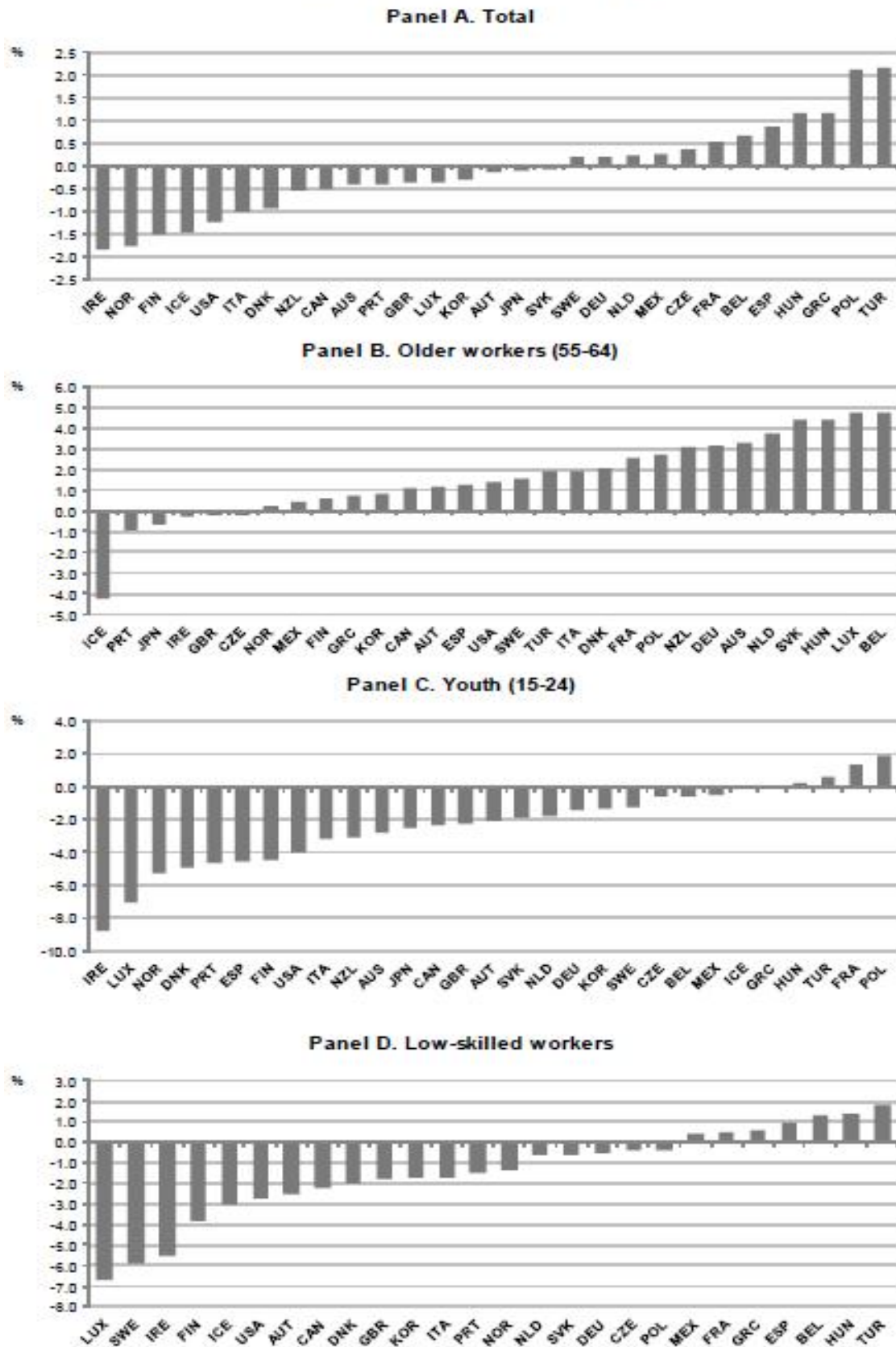


Panel B. Countries where the LTU incidence has fallen during the crisis



□ 특히 저숙련, 청년계층의 노동시장 퇴장현상이 크게 나타남

Figure 2.5. Change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Percentage points change from 2008Q2 to 2010Q2)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고용 보조금(2/3 OECD), 공공고용과 민간고용보조금, 직업탐색훈련 지원 확대(2/3 OECD), 실업수당 연장(1/2 OECD) 등이 도입됨

○ 특정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Table 2.1. Discretionary changes in labour market policy in response to the economic downturn

	Labour demand			Measures to help unemployed find work					Income support for job losers and low-income earners			Other training measures	
	Job subsidies, recruitment incentives or public sector job creation	Reductions in non-wage labour costs	Short-time work schemes	Activation requirements	Job search assistance and matching	Job-finding and business start-up incentives	Work experience programmes	Training programmes	Generosity or coverage of unemployment benefits	Social assistance	Other payments or in-kind support	Fiscal measures for low earners	Training for existing workers
Australia	X			X	X		X	X	X	X	X	X	X
Austria			X		X		X				X	X	X
Belgium		X	X		X				X	X	X		
Canada	X	X	X		X		X	X	X	X	X	X	X
Czech Republic		X	X	X					X				
Denmark			X	X				X					X
Finland	X	X	X	X	X	X	X	X	X	X	X	X	X
France	X	X	X		X		X	X	X	X	X	X	X
Germany		X	X		X		X	X		X	X	X	
Greece	X				X		X		X	X	X	X	
Hungary	X	X	X							X	X		
Ireland			X	X	X		X	X					X
Italy			X	X	X		X	X	X				
Japan	X	X	X		X	X	X	X	X	X	X		
Korea	X		X	X	X	X	X	X		X			
Luxembourg	X		X										
Mexico	X	X	X		X	X	X	X		X			
Netherlands			X		X		X	X				X	X
New Zealand		X	X		X		X	X		X	X		X
Norway			X		X		X	X					
Poland	X	X	X	X	X		X	X	X	X	X	X	
Portugal	X	X		X		X	X	X	X	X			
Slovak Republic	X	X	X			X					X	X	
Spain	X	X			X	X		X	X	X	X	X	
Sweden	X	X			X		X	X	X		X	X	
Switzerland			X										
Turkey		X	X	X			X	X	X				
United Kingdom	X			X	X	X	X	X		X	X	X	X
United States	X				X		X	X	X	X	X	X	

Note: Refers only to federal government initiatives. Additional measures undertaken at regional level are outlined in Annex "x" for some countries. In Denmark and Switzerland, active labour market expenditure increases automatically when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or is expected to increase). Neither these automatic increases, nor increases in expenditure on unemployment benefits as a result of growing numbers of unemployed, are shown in the table.

Ⅲ

고실업 지속을 막기 위한 정책 : 분석틀

□ 다음 다섯가지 분류틀로 나눌 수 있음

① 실업자 소득 보조 : 실업수당 등

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공공고용, 고용촉진 보조금 등

③ 조세정책 : 고용주의 세금공제를 통한 tax wedge 감소 등

④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 고용보호법, 경쟁촉진을 위한 독과점 금지법 등

⑤ 임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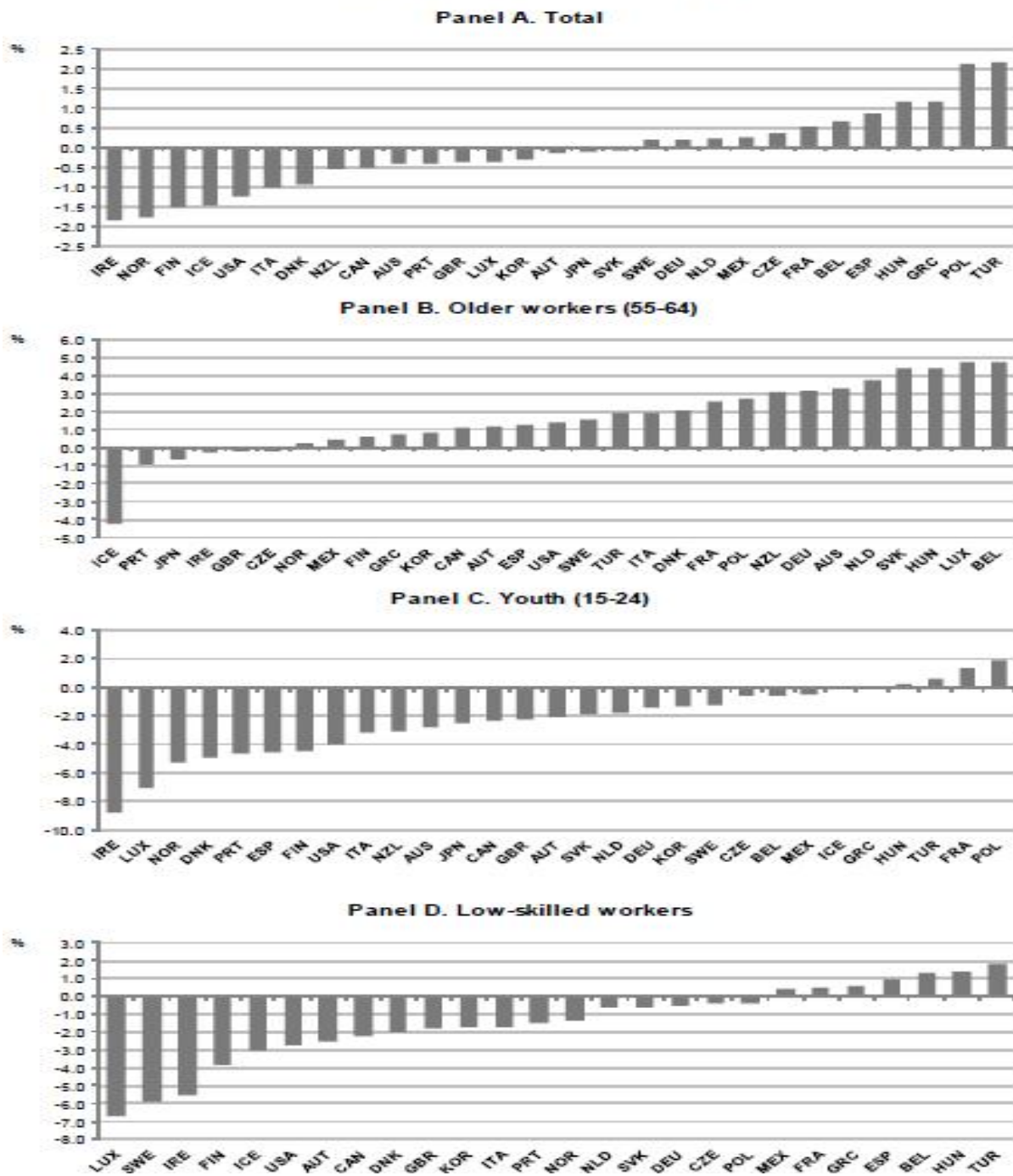
IV

고실업 지속의 위험

1. 위험은 국가마다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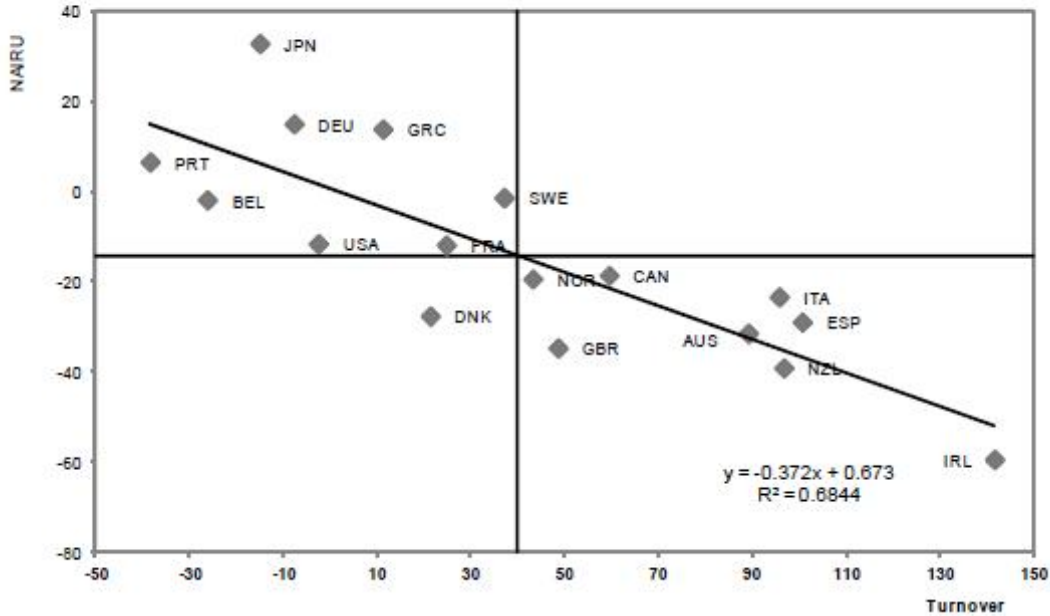
□ 국가별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율 변동 비교

Figure 2.5. Change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Percentage points change from 2008Q2 to 2010Q2)



□ 노동이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 감소에 기여

Figure 4.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unemployment and turnover
(Percentage growth between 1992-97 and 2002-07)



□ 실업률과 노동이동에 각종 정책이 미치는 효과 분석

①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 이동을 높이는 정책

- 직업 탐색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
- 상품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 고용보호를 줄이고 해고하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

② 실업률은 변화 없으나 노동이동을 높이는 정책

- 직업훈련,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
- 고정된 기간동안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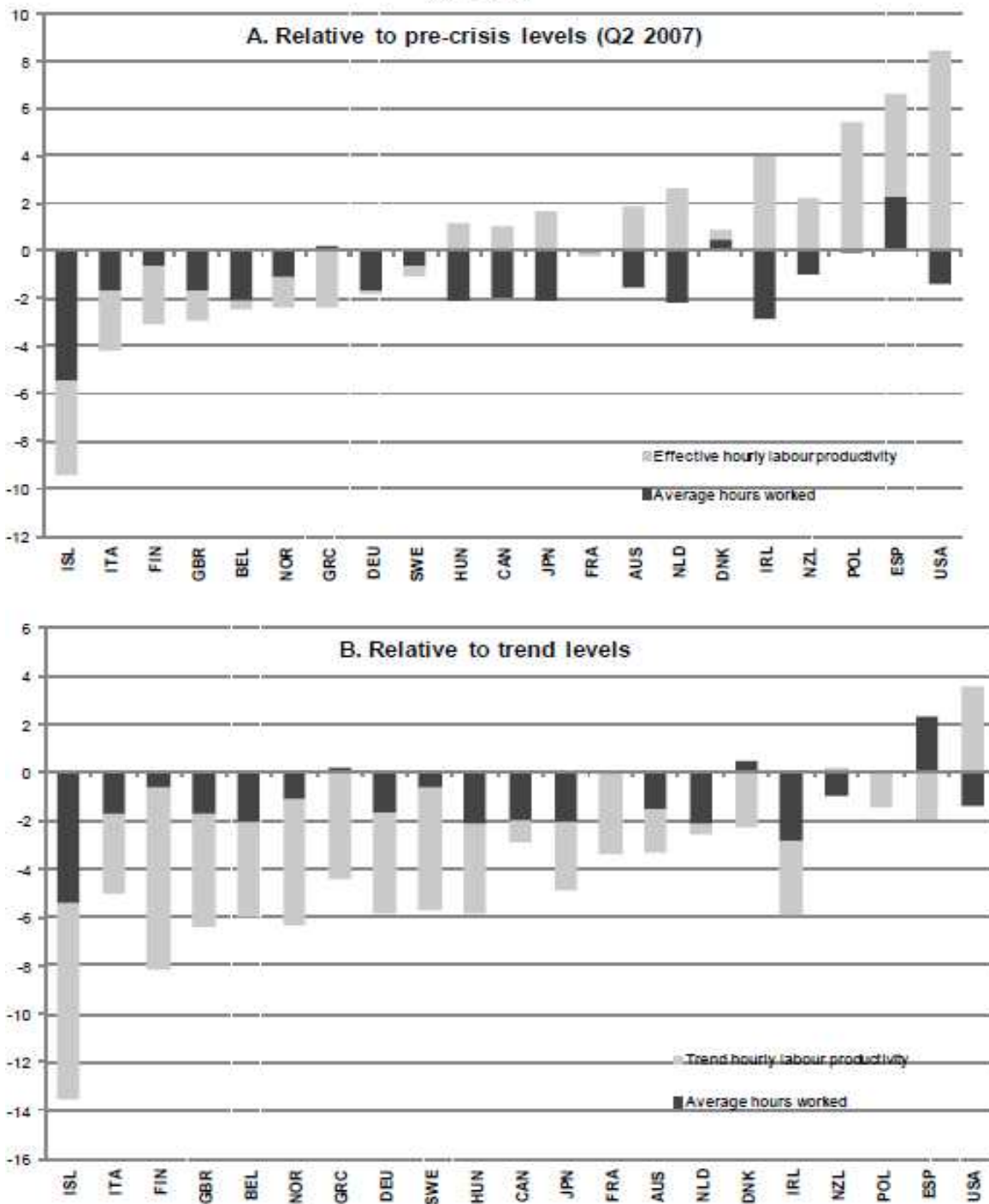
③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이동을 줄이는 정책

- 실업수당 연장시키는 정책

2. 실업자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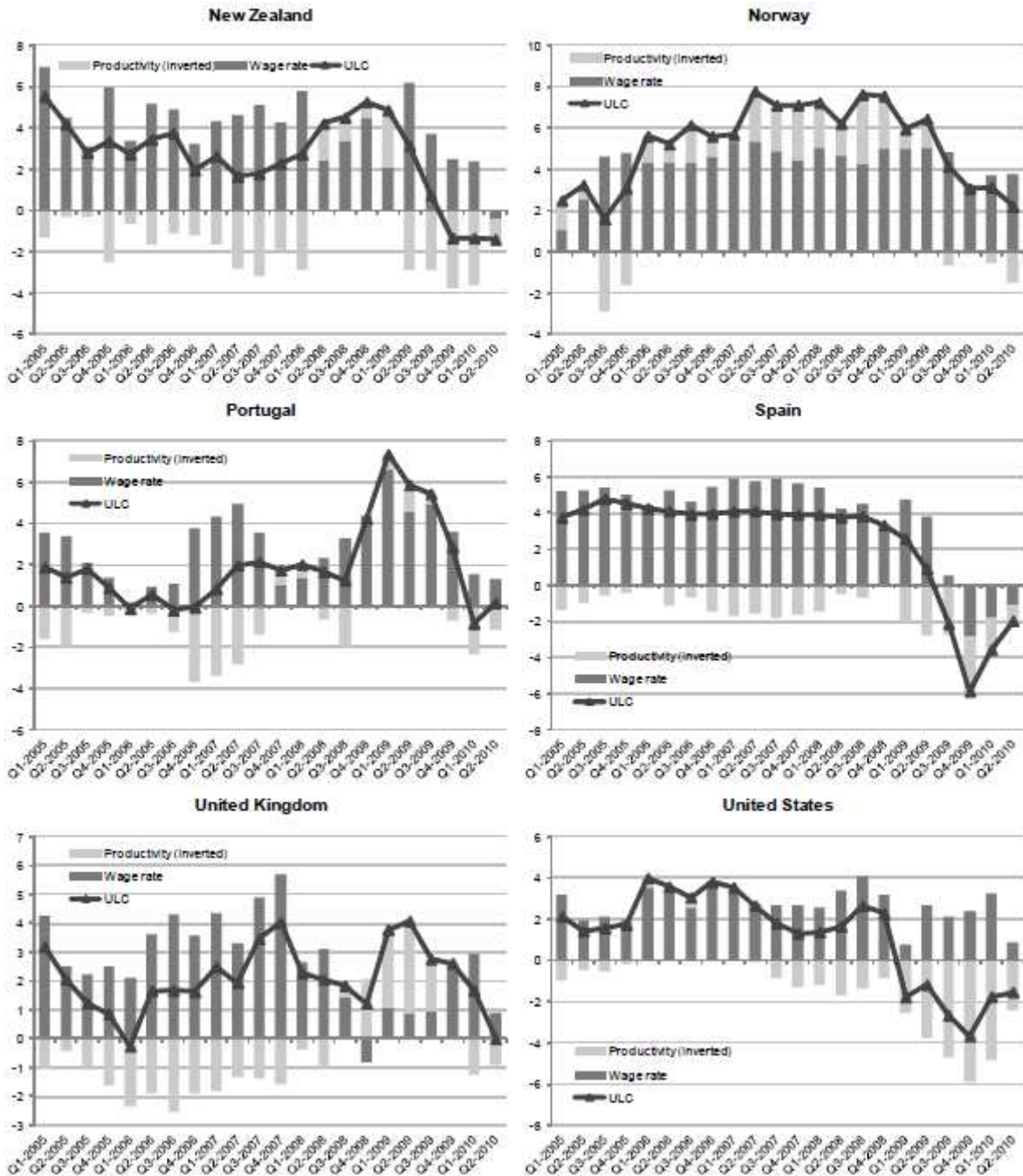
□ 많은 국가에서 위기로 인해 생산성은 크게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음 → 노동시장의 slack 이 많이 늘어났음 → GDP가 늘어도 노동시장은 빨리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Figure 4.5. Gap in hourly labour productivity and average hours worked
(Q2 2010)



□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이 빨리 줄고 생산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Figure 4.7. Evolution of wages, labour productivity and unit labour costs (ULC)¹ 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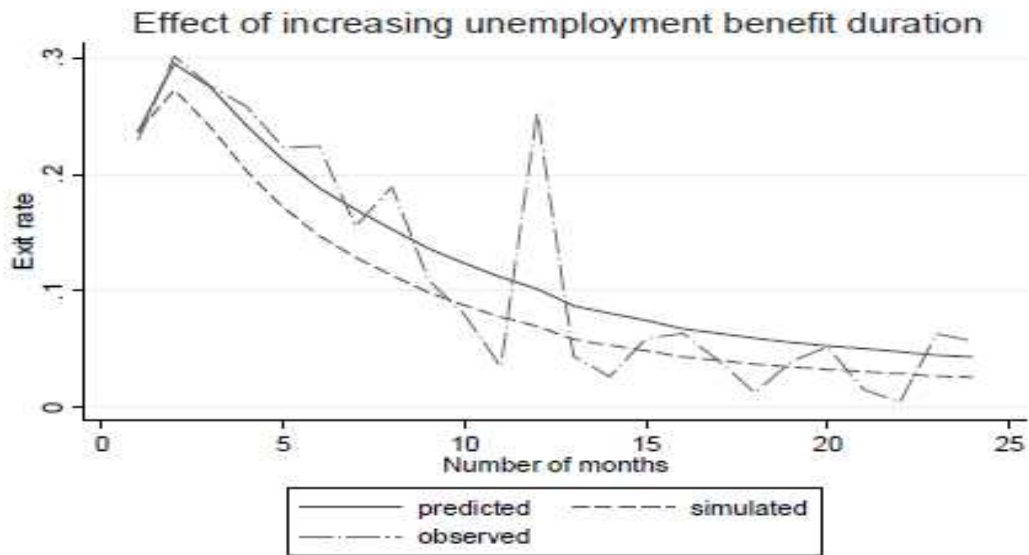
- 직업 매칭 효율성이 줄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음
- 결론내자면, 위기는 실업자의 퇴장속도를 낮췄고 이는 장기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 아직 노동시장의 slack이 많아서 퇴장속도가 단기간에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력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직업적, 지리적 미스매치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

3. 실업자 지속이 노동인력 퇴장으로 이어질 수 위험도 상당

- 노동력 퇴장의 위험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선 적으나, 특히 고령자 여성 청년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증가
 - 고령자 고용은 위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 소득감소 등이 은퇴를 연장시키는 효과.
 - 가장 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경우 어느정도의 비중이 학교로 돌아가는지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고실업 국가에서 특히 disability benefit수급자가 구조적으로 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음.(비가역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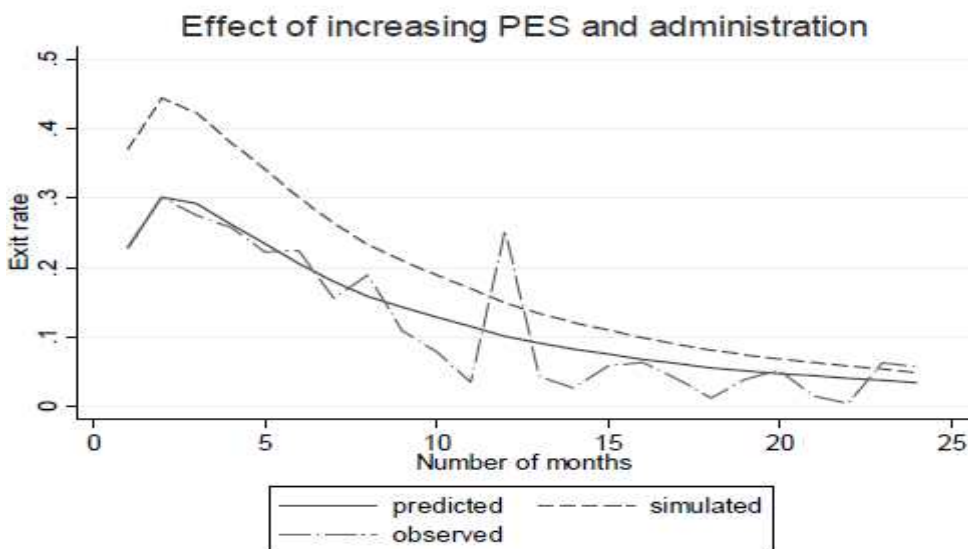
- ① 실업자 소득 보조 : 실업수당 수급기간 증가시 노동시장 퇴장속도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Figure 5.1.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 duration on unemployment exit rates



- 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공공근로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증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ALMP) 증가는 실업자 퇴장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Figure 5.2. Effect of placement and administration ALMPs on unemployment exit rates



③ 조세정책 : 고용주의 세금공제를 통한 tax wedge 감소 등

- Tax wedge를 감소시키는 것은 고용 증가에 매우 직접적 효과를 가져옴. 단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
- 특히 신규 채용에 대한 Tax wedge 경감이 전반적인 경감책보다 더 비용을 적게 들고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적게 불러일으키는 정책대안인 것으로 분석(OECD)
- 장기적으로 tax wedge일으키는 사회보장 부담금보다는 소비세, 환경 관련 세금 등 왜곡이 덜 일어나는 조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④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 고용보호법이 과도하고, 각종 규제로 경쟁이 제한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실업률 변화없이 일부 취약계층만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음

⑤ 임금 할인과 단기고용 정책

-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기업들과 비용분담(co-financing)기제를 도입하며, 빠른 퇴장(phasing out)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⑥ 타 정책목표와의 상충도

- 재정건전화 정책과의 상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장기적 노동시장 건전화 등과 고용회귀를 촉진하는 정책과의 충돌현상은 항상 존재

Table 5.6. The impact of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persistence on other economic objectives

	Timing	Budgetary cost	Social protection / Labour force part.	Longer-term resilience
Reduce initial replacement rate	Rapid	Negative	Reduce	Neutral
Shorten benefit duration	Rapid	Negative	Reduce	Neutral
Increase spending on PES	Fairly rapid	High	Improve	
Create public sector jobs	Fairly rapid	High	unclear (risk of strong displacement effect)	Reduce
Expand training programmes	Fairly rapid	High	Improve	No clear effect
Reduce labour taxation	Rapid	Potentially high	Neutral	Increase
Ease EPL on regular contracts	Fairly Slow / Medium term	None unless accompanied by stronger UI benefits	Improve if help reduce duality	Increase
Reform wage bargaining	Slow / long-term	None	Improve if reduce insider-outsider divide	Increase
Phasing out subsidies to short-term working schemes	Rapid	Negative	Reduce if jobs prospects remain bleak	Reduce

주요 토론 내용

□ OECD 사무국은 위기로 인한 실업 증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들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각 정책들이 장기실업률의 지속 등 이력현상을 낮추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분석

* 1) 실업자 소득보조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조세정책 4) 고용보호 법규 및 상품시장 규제 5) 임금 설정과 단기 고용보조 정책

□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위기 이후에 가장 뛰어난 노동시장의 성과를 보인 국가로서 독일 등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자국의 특수한 정책성공사례를 소개

○ 독일대표(Lead speaker)는 임금 협상(wage bargain system)에서의 높은 유연성, 협력적인 노사관계, 퇴장기제가 잘 마련된(built-in phase out system) 단기 고용보조 정책 등으로 인해 위기 기간중 실업을 늘리기 보다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대응하였던 것이 독일의 높은 노동시장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언급

○ 인도대표는 '05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최소 100일의 단기고용을 정부가 보조하며 이중 1/3이상을 여성고용으로 하도록 의무화)이 특히 여성실업률이 높은 인도에서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적용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중에 있음을 소개

○ 스위스 대표는 '02년 직업이동의 자율성을 높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 실직전 임금의 80%이상을 제공하고 직업탐색을 도와주는 실업보험의 존재 등이 자국의 노동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

□ 아국 대표를 비롯하여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보고서가 치중하고 있는 미시 노동시장 정책 분석에 더해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

- 거시적으로 노동수요를 늘려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국의 발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각국 대표가 공감대를 표명
 -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내부적인 부분과 총수요 변동이나, 산업전반의 경쟁력 변화와 같은 거시경제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됨
 - 각국이 당면한 위기의 특성과 거시경제 상황이 각각 다른 점도 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대표가 언급
- OECD 사무국을 비롯하여 다수 회원국은 금번 위기이후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특히 고령자의 고용이 건실하게 유지된 것에 비해 교육수준과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청년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
- 실직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이 높은 고령자와는 달리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장기간 남아있으며 낙인효과(scar effect) 등에 의해 구조적인 장기실업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동 보고서를 향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옴
-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를 실업률 변화와 함께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일자리가 없어지고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나누어(sectoral dimension)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됨
 - 특히 다수의 국가에서 건설, 금융 등의 산업에서 실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들을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reallocate)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본 연구를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됨
 - 아국대표는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급속한 정책전환이 고용의 단기적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대응 및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핀란드 대표는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이 아직 단기적 결과(short term horizon)만을 도출한 만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고 지적

□ OECD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5월 economic outlook의 special chapter로 발간될 예정이며, 회원국에 대한 경제보고서(EDRC)와 실제 정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간결히 요약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고용위원회 대표는 고용위원회에서 동 보고서를 더욱 깊이있게 연구할 계획임을 소개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몇몇 특징적인 부분을 소개

- 1) 유럽과는 달리 특히 미국에서 실직자의 재고용(outflow)이 현저히 감소한 것
- 2) 어떠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또한 실업이후 재취업시 종전과 비교하여 소득이나 고용조건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여 세밀하게 디자인할 경우 효율적일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4)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관찰하기 어려운 만큼 3년 이상의 장기 시계로 관찰할 경우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도출할 수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단일조건 계약(single contract)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ty)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보임

- 고용위원회 대표와 이탈리아 대표 등은 단일조건 계약이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일부 대표는 고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률 비용, 훈련비용

등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